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정책세미나



예술지원정책



Arts Policy,
Status and Prospects

현황 및 전망

2012.
10.24.
WED

place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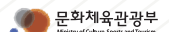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주관



2012 ARKO
미래전략포럼
준비소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정책세미나



예술지원정책



Arts Policy,
Status and Prospects

현황 및 전망

2012.
10.24.
WED

place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주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정책세미나

PROGRAM

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전망

일시 : 2012년 10월 24일(수) 14:00~17:00

장소 :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1부 문화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방향성

14:00-15:25

사회 왕치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개회사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김희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래전략포럼 준비소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문화예술 환경 변화와 법·제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14:10-14:25 정갑영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초빙교수

발제 2 변화와 지속: 지방이전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14:25-14:40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발제 3 문화재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방안

14:40-14:55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장,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토론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현황점검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14:55-15:25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진행)

박양우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손원익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ffee Break

15:25-15:35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정책세미나
PROGRAM

2부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15:35-17:00

발제 1 문화예술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15:35-15:50 정중헌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발제 2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

15:50-16:05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발제 3 문화복지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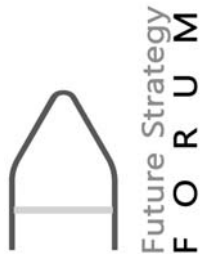
16:05-16:20 이지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제안

16:20-16:50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진행)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안치운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전 문예진흥기금 평가위원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리 및 폐회

16:50-17:00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정책세미나



목차 CONTENTS

03	프로그램	
07	1부 문화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방향성	
09	발제 1	문화예술 환경 변화와 법·제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갑영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초빙교수
27	발제 2	변화와 지속: 지방이전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35	발제 3	문화재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방안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장,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47	2부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49	발제 1	문화예술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정중헌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61	발제 2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77	발제 3	문화복지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이지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93	토론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102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공개행사 안내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공개행사 프로세스

대 토 론 회	창의성의 시대, 문화예술의 미래	10.17(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정책세미나	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전망	10.24(수)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전문가포럼	새로운 문화예술, 통섭과 융합	10.26(금)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지 역 포 럼	지역문화창조	10.30(화)~11.5(월) 대전, 광주, 부산(3회)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 정책세미나
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전망



1부

문화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방향성



발제1

문화예술 환경 변화와 법·제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갑영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초빙교수

발제2

변화와 지속: 지방이전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발제3

문화재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방안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장,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토론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현황점검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진행)
박양우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손원익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문화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방향성

발제 1

문화예술 환경 변화와 법·제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갑영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초빙교수

I. 시작하며

1972년 10월은 문예진흥법에 명시된 문화예술의 달 행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달이다. 그리고 같은 해 같은 달 17일은 10월 유신이 공포된 날이기도 하다. 정치적 경제적 격동기에 우리의 문화예술은 국가의 본격적인 지원대상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을 달려왔다. 그 동안 많은 것이 변화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과 역량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도 놀랍고 대견해 할 정도이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변화 또한 적지 않은 것이었다. 대중문화예술은 세계 속에서 그 위상과 역량을 증명하고 있으며, 순수문화예술을 돌아보더라도 나름대로 세계를 향해 존재감을 표현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사실이다. 총체적으로 소위 문화발신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지난 40년간의 일이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어우러진 결과이겠지만 지원과 정책 역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도움을 준 것임에 틀림없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더라도 그 환경이 엄청나게 척박하던 시절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의가 없다. 정책과 지원도 권위주의적 국가의 성격상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긍정적 효과도 매우 커서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와 그때 마다의 정책적 기조와 강조 내용의 변화로 진흥과 지원의 정책이 변화를 겪어오기는 했지만 순수예술진흥에서 향수자의 지원으로 정책 외연이 확대되고, 문화시설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되도록 하는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또 정책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오는 효과도 얻어왔다. 더욱이 오늘날 문화예술은 단지 이러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진흥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그리고 여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각종 사회갈등의 완화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정받는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정책

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과 여건은 과거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한 환경과 여건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지나 온 길을 돌아보고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예술 지원방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II. 문화예술 지원과 정책의 환경 변화와 전망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예술지원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환경과 여건은 그 동안 우리사회의 변화만큼이나 바뀌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당연히 지원과 정책의 조건과 내용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여기에 정치적 행정적 변화도 지원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예술 그 자체의 변화 역시 지원과 정책의 차원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조건인 만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문예진흥법 제정과 함께 시작한 문화예술 진흥의 4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 지원과 정책을 위한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전망해 보는 것은 우리의 예술과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예술은 그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래에서 몇 가지 변화와 전망을 다루어 보기로 하자.

1. 탈장르 혼융합의 심화, 경계의 모호화

문화예술은 이미 고유하게 설정되었던 장르를 넘어 서로 융합하는 현상이 있어왔으며 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실험적 시도를 통해 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예술생태계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문화 간 교류 및 접촉은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창조력의 향상을 위해서 권장하고 또 정책적으로 택하고 있는 주요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장르 혹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교류와 접촉을 위한 노력은 정책적으로 또 지원방식의 변화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 문화예술이 탈장르 혹은 혼용합을 통해 발전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더욱이 지원과 정책이 이러한 장르를 넘어선 혼용합과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 탄생하는데 기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여튼 이러한 경향은 하나의 경향으로서 지속될 것임에 분명하고 새로운 예술의 탄생은 물론 문화다양성을 위한 조건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며 그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 강조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문화예술은 단지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이나 사회갈등 해소와 같은 기능에 주목하여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정책차원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수, 문화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 개개인과 집단이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며 또 인정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또 주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해, 관용, 그리고 인정과 같은 가치는 하루하루가 무섭게 변화하며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다. 문화예술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기왕에 있었던 것이지만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는 좁게는 예술이 갖는 창의성 제고를 강조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바탕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한편 사회통합적 가치의 강조는 단지 예술만이 아니라 폭넓은 문화적 활동을 강조하고 나아가 광의의 문화개념에 입각한 정책이 요구되는 논리의 바탕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화예술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사회통합의 기본조건인 관용, 이해 그리고 인정과 같은 가치들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문화와 세대를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

되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문화예술 지원과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3.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와 동족 간 전쟁을 경험하고 짧은 시기에 압축성장을 하면서 강한 구심력을 필요로 하여 전통문화와 민족문화가 특별히 강조되던 나라이다.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주요문제는 전통문화예술과 서양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문화예술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과제는 그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을 수용하고 그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문화예술 창조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마침 다문화 사회화 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데 커다란 자극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곳곳하게 강조되고 있는 전통과 민족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현재의 변화는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다원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넘어 매우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요구한다.

4. 문화예술 창조 및 향수 차원에서의 지역적 격차 해소 요구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여건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는 제기되었으며 시간이 감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에 따라 또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할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역균형이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정책이 기획된 적도 있었으며 지역의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야한다는 주장과 정책도 있었다. 어느 경우든 문화예술의 접근에 대한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는 계속제기 될 것이며 또 해결하려는

시도 역시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은 문화예술 정책 및 지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결국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화예술 격차해소의 목표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대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하게 고려하고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5. 문화예술 비전문인 동호인 모임 활성화

문화예술에서 경계 간 모호성의 증대는 장르 간에서 만이 아니라 전문인과 비전문인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 못지 않은 식견과 능력을 가진 비전문 문화예술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과거와 다르게 가상공간에서 또 실제 공간에서 이러한 이들의 만남과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도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화의 심화로 개개인의 취향이 중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취향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삶의 여건 변화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전문적인 문화예술인들에게 자극도 되고 발전의 토양도 되어 문화예술의 수월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상의 변화와 발전이 문화예술의 생활화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일부 정책화를 시도하고 -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 있지만 향후 더욱 일반적인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행정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증대

전반적인 환경변화에 비추어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기대가 증대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기대와 인식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파악 및 체계화하고 그에 바탕을 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적어도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요구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면서 사회정책으로서의 효과를 강조하고 또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문화예술 환경변화

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요구 또한 커질 것이다. 예술을 중심으로 한 지원과 정책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는 물론 각 문화재단 등에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문화행정 영역 전반이 이러한 전문인력으로 충원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민간영역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영역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 융성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과 위기에 직면한 순수(기초)예술

근래에 약진하고 있는 K-pop을 반드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대중예술 및 몇몇 문화산업 영역의 발전은 우리 자신도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약진하고 있다. 세계에서 우리에게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정도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약진은 놀라운 것이지만 그에 비하여 기초가 되는 분야에서의 예술의 발전은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한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국민 전반적으로 그러한 분야에서의 향수가 크게 증가했거나 관심이 대폭 증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예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예술의 존재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여기에 전통문화예술도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의 약진에 기초가 되고 중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이 되는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분명한 메카니즘이 설득력 있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 시장실패요인이던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던 간에 -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이 건강한 생존기반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한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와 사회의 과제가 될 것이다.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과 대중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사이의 관계가 보다 설득력 있게 밝혀져야 하고 사회에 알려져야 하며, 문화예술이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사실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설득력을 높여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Ⅲ. 문화예술 현황과 개선과제

1. 문화예술 향수 및 창작 여건 현황

문화예술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과 또 문화예술 환경 그 자체의 변화가 예견되고 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예술의 현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광의의 문화예술 개념에 근거한 현황을 모두 살펴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문화예술 창작과 향수 현황만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그 간의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변화는 별로 없으며, 따라서 창작여건 개선과 문화예술 향수의 증대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음 알 수 있다.

〈표 1〉 연도별 문화예술 관람률 현황

(단위: 회/인, %)

연도	구분	문학	미술	음악	전통예술 공연	연극	무용	영화
2000	연평균횟수	0.1	0.3	0.2	0.1	0.2	0.03	2.2
	관람율	5.1	11.6	6.7	7.7	10.9	2.0	40.0
2003	연평균횟수	0.1	0.2	0.1	0.1	0.2	0.01	3.5
	관람율	3.9	10.4	6.2	5.1	11.1	1.0	53.3
2006	연평균횟수	0.1	0.2	0.1	0.1	0.2	0.01	3.9
	관람율	4.4	6.8	3.6	4.4	8.1	0.7	58.9
2008	연평균횟수	0.1	0.2	0.1	0.1	0.2	0.03	4.0
	관람율	4.0	8.4	4.9	4.4	11.0	0.9	61.5
2010	연평균횟수	0.1	0.2	0.1	0.1	0.2	0.04	3.3
	관람율	3.8	9.5	4.8	5.7	11.2	1.4	60.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91~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근거 재구성

다만 문예연감 등을 통해 나타난 자료를 보면 예술행사는 적어도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르별로는 감소하는 반면, 시각예술, 국악, 무용분야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일부 장르의 예술이 활성화되는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창작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표 2〉 연도별 전국 문화예술행사 현황

(단위: 회, %)

연도	문학(행사)		시각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횟수	증감률	횟수	증감률	횟수	증감률	횟수	증감률	횟수	증감률	횟수	증감률
2006	469	216.9	9,185	1.5	2,469	-8.0	5,640	26.9	2,617	-2.4	2,085	-6.7
2007	197	-138.1	9,840	6.7	2,792	13.1	5,721	1.4	2,983	14	1,755	-15.8
2008	297	33.7	10,965	10.3	1,621	-41.9	5,811	1.6	2,347	-21.3	1,736	-1.1
2009	250	-18.8	11,305	3.1	2,684	65.6	7,209	24.1	2,568	9.4	2,047	17.9
2010	247	-1.2	13,005	15	3,456	28.8	7,219	0.1	2,706	5.4	2,478	21.1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도별 문예연감 근거 재구성

예술인 실태조사나 예술단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인들이 평가하는 자신들의 창작활동 여건에 대한 인식은 표에서 보듯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표 3〉 창작활동 여건 인식

(단위: %)

창작활동여건	2003			2006			2009		
	만족	불만	평균	만족	불만	평균	만족	불만	평균
사회적 평가	18.8	43.4	2.66	22.2	38.7	2.75	19.0	37.7	2.73
창작발표 기회	15.6	61.3	2.37	14.6	57.6	2.44	14.3	57.2	2.42
외부의 창작활동규제	56.3	20.1	3.44	45.2	19.3	3.30	46.2	18.5	2.67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1.7	88.0	1.64	3.4	82.5	1.79	3.4	81.6	1.80
문화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	0.9	87.6	1.58	2.4	85.2	1.67	1.7	85.2	1.65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62.1	16.7	3.67	54.7	20.6	3.46	59.3	15.4	3.60

자료 : 각 연도 예술인실태조사 보고서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수입을 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음’(37.4%), ‘201만원 이상’(20.2%), ‘101~200만원’(13.8%), ‘51~100만원’(10.8%), ‘21~50만원’(6.9%), ‘10만원 이하’(5.1%), ‘11~20만원’(2.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입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2003, 2006년과 비교해 증가하였고, 101만원 이상 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3, 2006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평균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이나 여건이 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향수측면에서도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과거에 비해 증가한 흔적이 별로 없다. 다만 문화바우처를 비롯한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실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 분야에 지원이 크게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연동하여 보면 전 국민 전체적으로는 향수 측면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표 4〉 문화바우처 지원 실적(연도별/대상별)

(단위 : 명, %)

연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계
2006	104,704	33,112	8,796	17,942	16,455
	63.63	20.12	5.35	10.90	100
2007	106,300	24,626	4,851	15,299	151,076
	70.36	16.30	3.21	10.13	100
2008	146,080	333,334	6,088	32,396	217,898
	67.04	15.30	2.79	14.87	100
2009	188,163	41,159	10,946	56,011	296,279
	63.51	13.89	3.69	18.90	100
2010	231,978	64,106	39,512	133,773	469,369
	49.42	13.66	8.42	28.5	100
계	777,225	196,337	70,193	255,421	1,299,176
	59.83	12.4	2.86	14.6	100

〈표 5〉 문화향유사업 추진성과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문화바우처	22만명(27억원)	30만명(40억원)	47만명(67억원)
국립예술단체 방방곡곡 순회공연	-	-	97개 지역 / 691회
소외계층 문화순회	-	-	51개 지역 / 123회
소외지역학교 방문공연	-	-	463개교 / 2,656회

자료 : 「문화정책 3년 성과 자료집(2008-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1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타난 국민문화향수나 예술인 창작여건에 있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향후 정책적으로 짚어 보아야할 것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6〉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1973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성액	1048645	88,874	99,394	96,523	97,102	96,672	101,648	101,837	64,932	57,824	88,151
운용액	666,705	49,111	44,236	47,209	95,385	132,754	131,480	120,415	96,889	85,560	143,93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창작여건과 향수에서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반면 잘 알려진 것처럼 문화예술 정책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서 정확한 통계적 예측이 없어 얼마나 재정적적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문화예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정책적 수요까지 요구되는 현실을 보면 재정규모가 크게 늘어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모두 늘어 하겠지만 아직 괄목한만 한 증가폭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 기금과 같이 문화예술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늘어난 것 이외에 예술진흥을 위한 운용액은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04년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후 매년 500억원 내외의 모금수입이 감소한 반면, 문예진흥 기금사업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확대되며, 연간 1,000억원 내외의 사

업비 규모를 유지, 이로 인해 기존 적립금 인출이 불가피하게 되고,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금규모도 2010년 12월말 기준 3,162억 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나 한창때 보다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2.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 문예진흥법 등의 체계적 정비

문화예술정책의 모범 구실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가능하면 오늘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법이 제정되던 1972년의 여건과 오늘의 여건은 너무 다른 만큼 현재와 미래의 요구가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의미를 장르로 규정하기 보다 오늘날의 가치를 담아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법들을 전반적으로 체계 있게 재구성하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본다. 법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술진흥에 관한 법률과 국민 문화향수 증진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문화예술 관련 법 들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관련 법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주는 법을 제정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문화예술진흥법을 명실공히 관련 문화관련 여러 법들의 모범이 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편의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담는 법이 되어야 한다. 앞의 전망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과 문화예술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반영해야 하며 그래서 이를 지향하는 정책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2) 문화예술 지원과 정책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모색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사회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정책을 강조하는 만큼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문화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

은 일종의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현실은 문화예산의 증가는 고사하고 문예진흥기금 조차 오히려 축소 유지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 백억씩 출연하여 기금조성을 지원하는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그 정도의 상징적 정책은 필요할 것이다.

국민문화향수 증진을 위해서는 문화복지세와 같은 조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어렵다면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부담금 부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유흥주점업 등 사회에서 국민문화환경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업종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특별부담금을 부여하여 이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문화복지부담금(가칭)’, 혹은 ‘문화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문화생활 향상의 실현을 정책의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하여 재원충당이 아닌 정책실현을 위한 유도적 특별부담금 성격을 갖는 부담금을 신설한다. 부과대상은 반드시 효율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따질 필요는 없으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여러 곳에서 징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한 만큼 유흥주점업과 향락산업 관련 업종에서 일정 부분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복지)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명칭을 써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에 앞서 문예진흥법에서 향수권 증진을 위한 지원 등 문화복지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문화예술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우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은 전통적으로 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을 지향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예술단체육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왔다. 법적으로도 전문예술법인제도를 만들어 재정적 기부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문예술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할 것은 예술인들의 모임인 협회, 특히 각 장르 별 협회 등이 스스로 주도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한 대표성을 갖고 자신들 분야의 예술과 예술인을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교육기능 등을 갖추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지원을 의미

한다. 원칙적으로 민간단체이자 고유한 협회인 만큼 이들이 정책대상 자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능력강화를 위한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예술진흥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대표성을 확실하게 갖고 통계 및 각종 자료생산은 물론 정책적인 방안 제시능력과 다양한 회원교육 및 교류 능력을 갖는다면 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재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재단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단체들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현재처럼 지역의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날 많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안정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어 문화단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중장기적인 측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갈등의 중재자로서 문화예술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앞의 전망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에는 사실 문화적인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역할이 갈등완화 혹은 해소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진 다문화적 상황과 세대 간 갈등 등의 핵심에는 문화적인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갈등은 기존의 여타 사회적 갈등을 대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용, 이해, 그리고 인정과 같은 가치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근본 원인인 만큼 문화예술은 갈등조정에 매우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벤트성 혹은 행사성 접근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해 상호이해가 증진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예술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보다 깊은 사회갈등으로 표출될 세대갈등 해소를 지향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문화단체들과 협력하여 범 국가적인 지원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원정책을 넘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은 문화적인 접근이 가장 필요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정책 주관기능을 문화부로 옮겨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예술 지원원칙에서 이러한 기능에 비중을 보다 크게 두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재단의 상호 참여 제도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과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변화로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은 지역재단에서 전담하여 진행되고 있다. 반면 문화예술위원회는 일부 지역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의 대표성이 뚜렷하게 반영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금의 조성과 문화예술지원 전통에 비추어 외국과 같은 대표성을 갖고 지역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문화예술 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이 공통의 관심사와 과제를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문화예술위원회가 일정액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통의 지원과제를 시행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일부 규정을 고쳐 일정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여 영향력 갖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찌되었든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재단은 지속적으로 지원대상과 방법 등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필요하고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액다건주의가 지역의 지원방식으로 유지된다면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기 보다는 심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것은 용납될 수 없지만 전체의 틀에서의 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6)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영역 구체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오늘 날 문화예술 정책은 과거와 다르게 사회정책적인 성격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문화예술

분야와 정책이 고용이나 복지 차원의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방안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떠한 전문영역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무엇이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를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지원은 비록 예술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결국 지원정책을 비롯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전문화한다면 이는 문화예술진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무대예술 전문인력, 박물관·미술관 큐레이터, 문화예술교육사 등과 같이 전문영역과 전문인력 제도로 정착된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전문영역 발굴과 제도화 작업이 계속되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IV. 맺으면서

지난 40년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변화 속에 있었으며 우리의 삶은 경제적 풍요를 이루어 왔다.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도 적지 않았으며 또한 희생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유보되었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도 사회 곳곳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화예술은 그러한 변화와 요구의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와 개인 삶의 품격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예술은 흔히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지원·육성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책과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정도의 문화예술 환경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물론 그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이러한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을 위해 문화예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모색하여 그에 대한 믿음을 나누어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0년간

의 문화예술의 변화와 그를 위한 정책의 배경이 되었던 환경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문화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과거와 달리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이 타 분야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개인의 삶에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화예술과 미래를 이어 줄 최적의 지원과 정책방안이 무엇인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자, 이제 문화예술이 이 변화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아리아드네의 실이 되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지원정책을 모색해 보자.

1부 문화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방향성

발제 2

변화와 지속 : 지방이전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상과 역할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어떤 미래도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온다(존 듀이)

미래가 두려우면 우리는 과거를 바라본다(마살 맥루한)

과거 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존 스타인벡)

1. 움직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물리적, 심리적 기억들)

이사를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묘한 기대감과 낯선 두려움 그리고 그 동안 살던 곳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한다. 또한 함께 살았던 동네 이웃들과의 작별과 새로운 이웃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사란 장소와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며, 그러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물리적 소재지가 이동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위원회 직원과 이를 보는 관련된 문화예술계 전반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을 비감상적으로 보기보다는 감상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풍경으로 바꾸어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립적인 사회학이라 불리는 이러한 분야는 생태계적인 자연과의 효율적인 동의어로 쓰이며 비록 산업화 이후 장소는 다문화에서 최근 다중심으로의 변화가 모색된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장소로 정의되며 각각의 문화가 서로 종속되고 의지한다는 개념은 역사와 문화를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야기(Narrative) 통한 이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40여년의 대학로에서 짧았던 구로 시절 또 앞으로 나주로의 이전은 정부의 지방이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흐름을 넘어 이 의미는 이동에 대한 책임 있는 인식으로 비롯되어야 하며 그 것으로 파생되는 것이 예술(적)이라 할 것이다. 즉 땅은 지도상의 위치가 아니라 아이디어이며 때로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도 말한다. 대학로-구로-나주라는 장소는 어떤 사람에게 삶은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곳이며 신성한 장소는 ‘바른 장소’이며 예술의 집이다.

우리 중의 대부분은 이동을 하며 종종 이동해 본 적이 없거나 혹은 다른 장소에서 온 사람들과 교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서로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언제나 불가능함에도 우리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개인적이며 정치적

인 또 앞으로 일어날 일과의 연결은 지역 고유의 장소성이라기 보다는 혼성, 잡종이라는 혼혈의 문제를 중요시하며, 중산계급의 예술유형이 지역에 동떨어져 있어도 같은 중산계급보다도 떨어진 지역에 다른 종류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상상력이 되며 예를 들면 최근 잦은 이동에 따른 터미널, 교통수단의 전이공간은 사이버상과도 연결되며 전통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지적인 장소’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사회학적으로 거리가 확장된 것 혹은 물건들 사이의 간격이라는 공간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교차적인 나아가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며 장소에 대한 권력이 사라지고 잊히는 것이 예술(적)이다. 예술가들은 언제나 문화의 편협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적이고 신화적인 자연을 더욱 기록하기 위해 둘러보고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어디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드러낼 수 있고 더 나은 위치는 직접적인 예술계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친근성은 중요하나 예술계 바깥의 시각에서 문화예술을 들여다보고, 익숙함의 문화로부터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것도 당면 과제이다.

움직이는 문화예술위원회는 물리적 현상만이 아닌 감성적인 부분이 있으며 주변 문화예술계 전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지원과 협력’이라는 틀에서 새로운 지역과의 만남을 통한 외부에서 예술을 확장하여야 하며 장소에 대한 인지적 상상력을 갖고 다중심적이며 혼성적인 문화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 계획된 것과 계획되지 않은 것

전반적인 외부환경의 변화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역량이 요구된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세수감소와 예산증대의 어려움, 문화예술계의 주된 고객인 10대 20대 젊은 층 인구의 감소, 가족구조와 가족가치에 대한 변화 등의 요인이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주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예술작품의 창작과 표현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지원을 해 왔으며 창작 횟수와 발표 횟수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결과물 중심의 지원은 예술계의 “지원이 없으면 창작이 없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공모형 지원 사업은 현재 지역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범위와 역할 구분

이 대두되고 있다. 신청금액과 신청건수의 진흥원이후 문예위에서의 증가는 상당하였다. 지역문화재단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1998), 강원문화재단(1999), 부천문화재단(2001), 고양문화재단(2004) 서울문화재단(2004), 인천문화재단 등이 설립되어 현재 총 광역 11곳, 기초 27곳이 운영되며 기초의 대부분은 시설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기존의 지역문예진흥기금을 문화재단에 출연함으로써 단순사업을 이관한 형태로 되었다. 공모의 형태로 선정되는 지역문화재단의 대표들은 재단을 운영하는데 일정한 자율권이 보장되나 그 정도는 임명권자의 배경과 의지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명망가로 구성된 이사회보다는 지자체의 문화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는 이사회에 의해 주로 정책결정이 되는 외국의 사례와 차별되는 것이다.

3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의 2011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시설, 교육, 기타를 포함한 경기문화재단(161개), 서울문화재단(61개), 대전문화재단(38개), 부산문화재단(34개), 인천문화재단(28개) 순으로 편차가 있으며 기금규모도(2008년 기준) 서울 1,126억, 경기 1,030억, 인천 482억으로 무척 다양하다.

지역문화재단은 대부분 재정을 지자체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주무부서의 공적기금 운영에 따른 지시와 민간단체의 고유사업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매우 힘든 구조이다. 이는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을 바라보는 담당공무원과 단체장과 이사회, 대표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 지가 문예위와 지역문화재단의 협업관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국가보조금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보조하며 공익을 위한 활동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편익이 어디로 파급되는 지에 따라 지역 고유와 지역 간 편익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측정한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조금 제도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근간으로 수직적 또는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국가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정한 사용조건을 전제하므로 조건부 보조금 또는 특정 보조금이 된다. 또한 대응보조금의 경우 지원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한, 혹은 유한 보조금으로 나뉜다. 일반국고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나온 보조금은 사회적 효과면에서 문화예술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초예술 창작과 향수자 지원을 담당하는 문예위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금과 같은 창작지원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외부효과 중 특히 파급 효과에 대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 사업은 다른 부처에 비해 지원총액으로 상위권에 있지 않으나 외부효과 측면에서 담당자의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

4. 영향(Impact)에 대한 기대

서구 복지국가의 문화정책 모형은 대부분 지역에 근간한 민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체성확보를 하여 차별적인 문화외교를 펴고 있다. 민속(Folk)은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 문화의 확장을 모색하여 시민정신을 높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을 통하여 참여하고 자기안녕감을 추구하여 행복사회를 기대하고 있다. 영향연구(Impact Study)는 단기간의 일회적인 지원에 대한 평가이기 보다는 지역의 문화계획(Cultural Planning)에 근거한 장기적이며 수요예측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한 대화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몇 개의 정책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수직적인 지원이 아닌 발굴-선발-지원-육성이라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지역교류를 위한 인적투자와 최종결과물에 대한 선발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위원회로서 걸맞은 기획정책 기능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옹호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지원이 예술계의 재원을 넘어 위원회는 공공을 만나는 것과 비예술계에 대한 접촉 그리고 이를 특정 위계적 장소가 아닌 움직이는 위원회로서 자리 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발굴-선발-육성-지원제도는 유럽의 문화도시 프로그램에서도 드러나며 정책의 즉각적 결과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인구계층과 산업, 교육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구 3,000명

의 작은 마을과 1,000만 명의 대도시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특성을 같이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공모사업 뿐 만 아닌 지역의 기존시설에 대한 재활용, 공공예술, 도서관, 지역상공인, 관광과의 연결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문화가 활동하도록 문예위의 위상은 당분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라는 지역을 대표하지만 지역문화재단의 전형으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비영리 조직의 사이클의 마지막인 환경과 조직 모두 기대하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나 급격한 외부환경변화에 의한 새로운 필요를 창출해야 하는 시작은 결국 리더십의 역할을 강조한다.

5. 결국은 리더십이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이웃과 고객의 일부변화는 문예위가 대중의 갈망인 예술창조에 대한 공유와 기쁨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문예위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현재를 모두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제한된 민간재원을 발굴하고 예술계와 연결시키며 지역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공모지원의 권위적인 태도이기 보다는 우리나라예술계의 고민을 나누는 응급실격인 상징적인 기관이다. 환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예술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리더십은 사람, 장소, 지역 간의 네트워킹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들 간의 네트워킹의 동기를 주며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떻게 사회화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부 문화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방향성

발제 3

문화재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방안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과장,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 본 원고는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2012. 10. 24)의 발제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I. 들어가며

- 최근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모든 분야에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 문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의 시의적절한 토론 회에서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기대

-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 중의 하나인 문화재정
 - 문화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충은 중요한 정책이슈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재정(예산)은 정책을 표현하는 한 측면으로 재정규모 그 자체의 확대만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
 - 비전과 정책이 제시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 확보의 측면으로 접근

- 문화재정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충을 논의하기위해 사전적 검토 사항
 - 우리 문화재정(문예진흥기금)의 현황, 추이를 파악하고 그 규모의 적정성 검토
 -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점검
 - 재정 확대의 규모, 필요성 등 목표(계획)를 구체화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적립금 확대, 사업비 증가, 안정적 자원대책 등의 필요성, 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인 분석 결과 등이 제시될 필요

- 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
 -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과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전제
 - 재정 확대, 안정적 자원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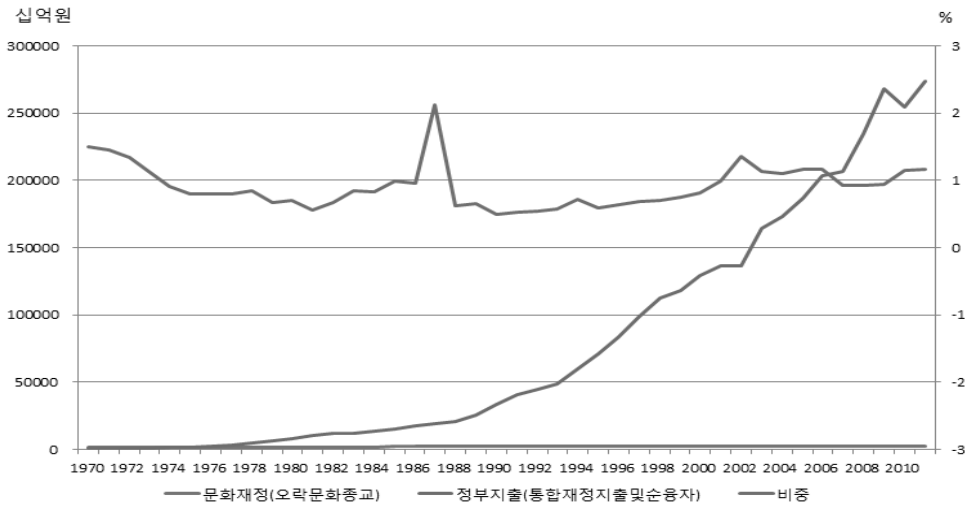
II. 문화재정의 현황

1. 문화재정의 추이

□ 총지출 대비 1% 수준의 문화재정

- 우리나라 정부 지출의 규모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
- 통합재정 기준으로 정부 지출에서 문화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전기 간 동안 1% 수준에서 유지

〈그림 1〉 정부 총지출 및 문화재정의 추이



주 : 통합재정기준으로 정부지출은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지출 및 순용자’, 문화재정은 기능별 분류의 ‘오락, 문화, 종교’ 분야임.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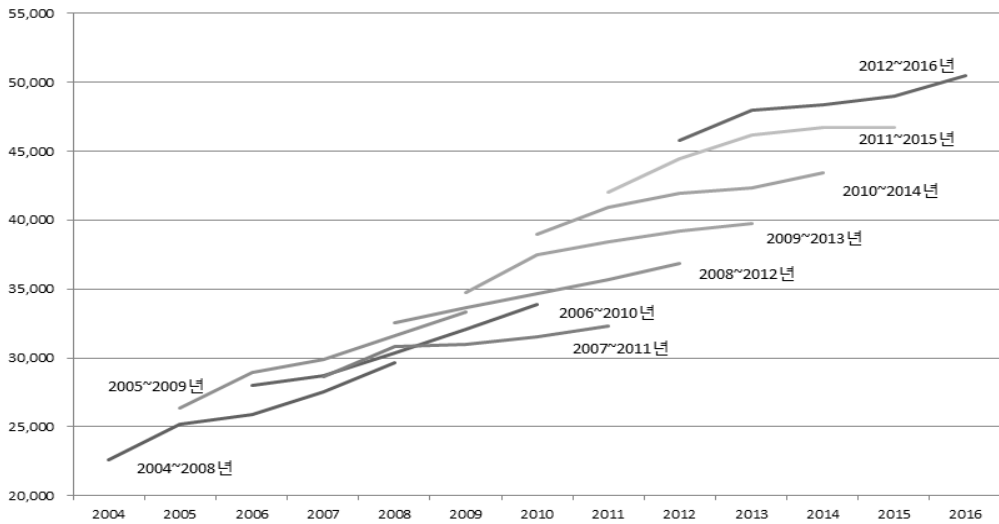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산이 1%를 상회

- 당시 문화대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문화예산이 총예산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정책목표처럼 쓰임.
- 그러나 각국마다 재정규모를 표시하는 방식이나 문화예산의 범위,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움

- 문화예산 1%가 달성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 우리 국민의 문화생활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유념할 필요

□ 최근의 문화재정 변화

〈그림 2〉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문화 및 관광' 분야 자원배분 추이
(단위: 억원)



(단위: 백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문화분야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58	480	484	490	505	2.5	4.6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20	444	461	467	467		2.7	4.8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389	410	419	428	435			2.7	4.8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347	375	384	392	398				3.4	4.2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325	336	346	357	368					3.1	6.2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86	308	309	315	323						3.1	6.9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79	286	303	320	338							4.9	6.4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63	289	298	316	333								6.0	6.3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25	251	258	275	296									7.0	6.3

주 : □ 당해연도 예산, ■ 예산안, ■ 계획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호

- 문화재정의 추이를 통합재정 기준의 장기 시계열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분류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최근 사용되는 총지출 기준의 분야별 지출로 검토
- 중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부터 작성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문화관광 분야의 자원배분 계획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매년 낮은 증가율을 유지
- 그에 따라 총지출에서 문화관광 분야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
-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훼손된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위해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급격한 확대는 향후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표 1〉 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 및 관광분야 비중

(단위: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부총지출(A)	196.9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25.4	342.5
문화관광분야(B)	2.5	2.7	2.9	2.9	3.3	3.3	3.9	4.2	4.6	4.8
비중(B/A)	1.24	1.30	1.30	1.21	1.24	1.15	1.33	1.36	1.41	1.40

주 : 2013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호.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추이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4,44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사업비는 1,143억원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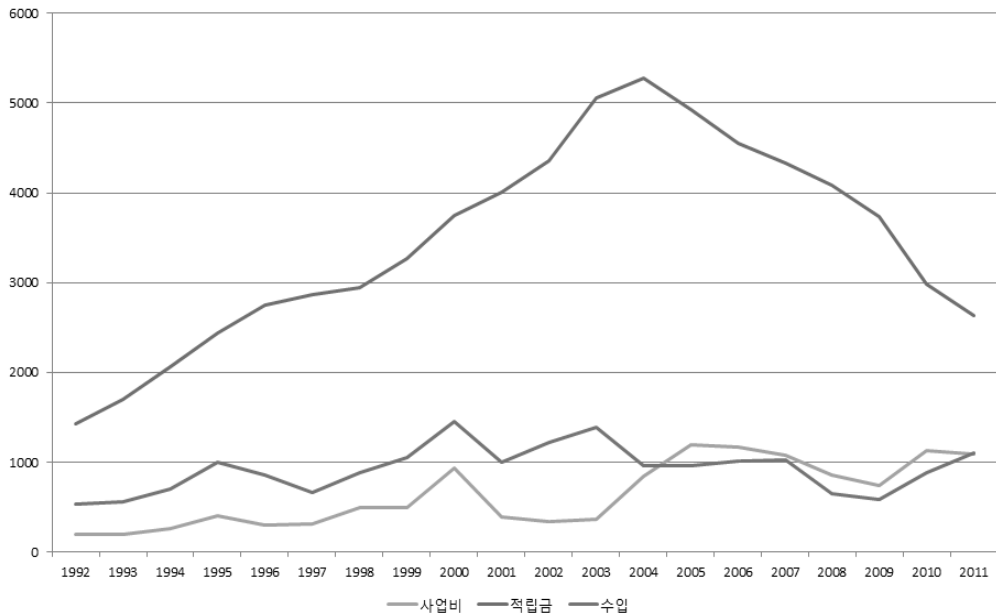
- 기금의 수입구조는 복권기금 전입금, 경륜경정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04년 모금수입이 폐지되면서 복권기금으로부터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전입 받고 있으며, 2013년에는 576억 원을 전입 받을 계획
 - 복권기금 전입금은 2004년 446억 원을 전입 받은 이래로 2007년까지는 매년 500억 원 정도의 전입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198억 원, 2009년 218억 원, 2010년 237억 원으로 낮아졌다가 2011년부터 다시 500억 원 정도의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비 규모는 2003년까지 약 300억 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4년에 800억 원, 2005년에 1,171억 원으로 1,000억 원 규모를 넘어선 이후 유지
 - 2004년 이전에 사업비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던 것은 1998년 출판금고 200억 원 용자지원, 1999년 영화진흥금고 100억 원 출연, 2000년 영화진흥금고에 500억 원 출연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적립금 규모의 감소
 - 적립금 규모는 2004년 5,272억 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343억 원이 감소하여 4,929억 원이며, 2006년 289억 원이 감소한 4,640억 원, 2007년은 311억 원 감소한 4,32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2004년 모금수입이 없어지면서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금 수입이 있었으나 사업비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적립금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
 - 적립금의 감소는 사업비를 충당하는 이자수입의 감소를 야기하지만 향후 저금리 추세 등을 고려하면 지속하기 어려운 재원조달 방식임

〈그림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정 추이

(단위: 억원)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Ⅲ. 재정 확충방안의 모색

1. 문화재정의 여건 변화 : 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도전

- 문화재정도 국가재정운용의 일부로 인식
-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중기재정운용,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 국가재정제도가 변화하였으며, 향후에도 재정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임
- 국가재정제도의 변화는 문화 분야 재정운용에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한정된 예산제약 하에 높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함

-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제약
 - 재정지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하는 문제
- 특히, 기금 정비, 기금 여유자금의 회계·기금 간 전출입 허용,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제도의 변화는 문화 분야 재정 운용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중요한 재정 과제로 고려되어야 함

2. 향후 국가재정의 어려움 예상 : 문화 재정 확대의 한계

- 국가재정 여건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와 세입여건 악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상
- 한정된 예산제약 하에서는 문화관광분야는 타 분야와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되며, 보다 많은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확보할 필요
-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이 국가재정의 상당부분(50%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문화 분야를 포함한 타 분야의 재정 확대는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

3. 안정적 자원 확보방안 모색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 향후 지속적으로 저금리 추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립금 규모의 확대와 적립금에 기초한 이자수입을 안정적 재원으로 보는 것은 한계
 - 현재 2,600억 원 규모의 적립금을 매년 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10년 정도에 걸쳐 소진하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와 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문예진흥기금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복권기금 전입금 확대 및 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수익금 배분 방식의 개선 필요하며, 법정배분을 포함한 수익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안정적으로 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2009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보호기금」은 법정배분에 포함
- 복권기금 수익금 배분 조정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 복권수익금의 성격상 역진적 소득 분배의 문제가 있어 일정소득 이상 계층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복권기금 전입금은 주로 향수기회 확대 분야에 치중하게 됨
- 또한, 500억 원 이상의 복권기금 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나머지는 복권기금으로 반납하게 되어 문예진흥기금에 적립할 수 없음

□ 문화 분야 기금의 통합 운영

-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조 6,402억 원 규모임
- 수입측면에서 출국납부금 등 법정부담금 수입이 4,898억 원, 복권기금 전입금이 1,082억 원, 경륜경정, 투표권 등의 사업수익이 6,185억 원 등
- 지출측면에서 인건비는 242억 원, 주요사업비는 1조 7,050억 원, 여유자금 운용이 8,869억 원 등임
- 이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통합적 운용으로
- 출국납부금, 카지노부담금 등의 부담금 수입과 경륜경정수익금 등의 사업수익, 이자수입 등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여유자금의 사업비 전환, 기금운영비 절감 등의 재정적 측면의 장점
- 관련 개별 기금법의 개정, 관련 조직 개편 등 문화재정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기간에 실현가능성은 낮아 장기 과제로 검토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문예 진흥기금	영화발전 기금	지역 신문 발전기금	언론 진흥기금	관광진흥 개발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합계
수입	자체수입	2,347	1,152	23	199	7,275	6,992	17,988
	법정부담금	-	338	-	-	-	-	338
	융자원금 회수	-	4	17	31	2,392	128	2,572
	기타	2,347 (경륜경정 전 입 금 291, 이자 수입 106)	810 (이자수입 103)	6	168	4,884 (출국납부 금 1,928, 카지노 납 부 금 2,474)	6,865 (골프장 부담금 496, 경륜경정 전입금 548, 투표권전입 금 5,346)	15,080
	정부내부 수입	784 (복권기금 전 입 금 576)	716 (일반회계 전 입 금 400)	-	-	50	506 (복권기금전 입금 506)	2,056
	여유자금 회수	1,314	1,761	142	382	457	2,300	6,356
합계		4,446	3,630	164	581	7,782	9,799	26,402
지출	지출	1,218	1,187	114	238	6,519	8,257	17,533
	인건비	66	76	3	-	5	92	242
	기본경비	63	22	4	6	1	144	240
	주요사업비	1,089	1,089	107	231	6,513	8,021	17,050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	3,228	2,442	51	343	1,263	1,542	8,869

주 :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민간 기부 확대

- 민간 지원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메세나협의회와의 역할 분담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 기부를 확보하는 방안과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민간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을 확대하는 정책 지원은 기본적으로 조세정책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업의 사회공헌, 경제 민주화 등 논의와 함께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IV. 마치며

- 문화재정도 국가재정의 일부라는 인식 하에 국가재정 여건과 제도 변화를 고려
 -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재정운용의 최우선 목표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문화 분야 자원배분의 증가에 어려움 예상
 - 특히, 성과관리, 기금 정비 등에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노력 필요
-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민간부문과의 역할 분담을 검토할 필요
 - 국가재정 여건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가재정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서는 민간의 기부를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
 -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민간부문(메세나)과의 역할 분담 고려
- 문화 재정에 관한 연구 강화
 - 문화 분야의 재정정보와 기초 통계의 생산, 재정적 측면에 연구가 축적되고 이런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문화재정의 확대를 주장



2부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제 1

문화예술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정중헌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발제 2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발제 3

문화복지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이지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제안
이종인 한국문화행정연구소장 (진행)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안치운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전 문예진흥기금 평가위원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부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제 1

문화예술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 예술위 제도 개혁을 통한 창작지원 집종의 필요성

정중헌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I. 시작하며

1. 1973년 문예진흥원 출범으로 예술인 지원 시작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 지원제도가 법제화 된 것은 유신 선포 직전인 1972년 8월이었다.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문화예술진흥법’은 제1조에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법에 의해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출범시켰다. 1974년에는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1974~1978년)’을 수립해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문화정책을 추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예술 진흥기구와 공간 확충, 창작 진흥을 위한 예술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시기에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1973년 ‘문화의 날’ 제정에 이어 대한민국 문학상(1976년), 대한민국음악제(1976년), 대한민국연극제(1977년), 대한민국작곡상(1977년), 대한민국무용제(1979년) 등을 신설했다. 1973년 영화진흥공사를 설립했고, 1978년에 김수근의 설계로 문예회관과 미술회관이 대학로에 건립되었고, 같은 해 세종문화회관이 신축 개관했다.

2. 초심을 잃어버린 문예 진흥 정책

새삼 유신시대를 들먹이는 이유는 그로부터 40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정권이 부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꺾목할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지원의 원천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대규모로 조성한 후 극장 모금 등으로 충당해오다가 2003년 현재 판결로 모금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매년 원금을 침식해 현재 고갈상태에 이르렀다.

초기 문예 진흥 정책은 민족문화 증흥을 목표로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조라는 이념과 기조가 분명했다. 국학 개발과 고전 국역 등 우리 문화 재발견에 역점을 둔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성과 독창성을 강조했다.

문화예술인 지원이 활기를 띤 시기도 1970년대 중반이었다. 1975년에는 작가기금 1억 원을 확보하여 작품 출판을 지원했고, 창작 공모와 지방 예술 활동 지원도 확대했다. 그런데 문예진흥원 시대를 거쳐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면서 이 같은 이념과 기조가 퇴색한 채 지원 체계만 복잡해 졌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예술위원회 지원제도는 한국의 문화 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 점은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40년 가까운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부합할 만큼 수준 높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키워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I. 예술가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1. 예술가들에게 여전히 문턱 높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73년 문예진흥원 발족 당시부터 40년 가까이 기자로,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참여하여 필자가 지켜본 소견으로는 사회 변화에 그때그때 적응하는 노하우는 강하나 누적된 피로감이나 예술인들의 불만족을 해소할 돌파구를 열려는 개혁 의지는 약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 지원기구로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예술인들에게는 여전히 문

턱이 높을 뿐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며,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후 처리가 까다로운 기관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술인들은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소액다건 지원이나 다액소건 지원이나, 직접지원이나 간접지원이나, 사전심사나 사후심사나, 선택과 집중이나 등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정책을 해왔다. 여기에 중앙 집중 지원과 지역의 소외 문제, 평가의 객관성 문제, 심사의 불공정 문제 등이 불거져 지원 사업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예술인 지원정책의 허점과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예술인 지원정책의 핵심은 창작 활동 지원이다. 생계지원이나 4대 보험 지원도 포함되지만 생계지원은 원로예술인 3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 실정이고, 4대 보험 지원도 고용보험은 안되고 산재보험은 부분 허용될 뿐이다. 때문에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은 예술위나 지역 문화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대다수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창작 활동은 고사하고 생계유지마저 힘든 예술인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다 보니 천신만고 끝에 지원금을 타내면 우선 생계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다. 지원 조건에는 분명 인건비 지출은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예술계의 실상이다. 때문에 창작 활동에 필수인 제작비는 줄어들고, 제작비가 충분치 못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지원을 받아야 창작을 하고, 지원금 보다 적은 제작비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지원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해마다 엄청난 건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평가나 주목을 받는 작품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지원 제도의 모순과 운영 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2. 너무 방만해져 특징이 없는 지원 제도

세월이 흐르면서 지원 제도의 메뉴는 매우 다양해졌다. 2012년 문예 진흥기금 운용 계획 중 큰 항목만 꼽아보면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공간 운영, 생활 속 예

술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진흥,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등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사업은 예술창작 지원과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으로 나뉜다.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문학창작, 공연창작기금,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창작 매개활동 지원 등으로 세분된다.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문학창작 집필실,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 공간, 공연 예술 전용공간, 다원예술 매개공간, 예술지원센터 조성, 예술가 소통공간 조성 등 다양하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 육성 지원 프로그램인 아르코 영 아트 프론티어(AYAF) 지원은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다. 복권기금으로 운용되는 생활 속 예술 활성화 사업은 소외계층문화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어 문화바우처(문화 소외계층 세대에 월 5만원 문화 활동비 지원)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 나눔(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으로 사랑티켓, 전통-문학-전시-창작 나눔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부 내역으로만 보더라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은 전 방위로 펼쳐져 있다. 이는 예술생산자인 예술인과 예술단체뿐 아니라 예술소비자이자 향수자인 국민, 그리고 소외계층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면도 있지만, 반대로 지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어느 하나도 충실하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의 방향성

다음은 문화예술위원회가 밝힌 20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의 방향성이다.

- 1) 예술 각 분야의 특성을 지원 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목표별 공모사업 편성체계를 분야별 사업체계로 재편함.
- 2) 예술 장르 간, 학제 간 융·복합형 예술창작사업과 분야별 예술 비평 활성화 지

원체계를 마련하여 새로운 예술담론 형성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문화적 통섭을 지향하는 시대적 환경에 적극 부응하고자 함.

- 3) 예술 활동을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으로 생각하는 전문예술가들의 안정적 창작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회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단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함.
- 4) 일방적 문화교류를 지양하고 해외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예술창작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함.
- 5) 지원심의의 책임성 강화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해 책임 심의위원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 6) 많은 예술인들이 설문을 통해 보내준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4. 예술인 복지법 제정으로 지원정책 개혁돼야

여기서 최근의 예술계 움직임과 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각 재단의 기금지원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예술인복지법 제정과 시행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난 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올해 시행령이 마련되어 금명간 예술인 복지재단이 출범하는 등 예술인 복지 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까지 공론화 되는 등 예술인 처우에 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다. 문화예술위원회도 창작 지원기금의 지역 이관을 통해 중앙 집중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의 현황과 요구 및 특성에 맞는 예술가 지원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위원회는 사후 지원만을, 지역 재단의 경우는 종전의 방법대로 사전 서류 심사에 의한 지원으로 방법을 차별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분야가 전통적인 예술장르에서 한걸음 나아가 새로운 예술장르와 문화산

업 분야로 확대(다원예술과 융·복합장르 등)되는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 지원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 현장예술인들의 불만

이러한 발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지원 정책은 현장 예술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장 예술인들은 예술위나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이 예술인 자신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원 정책이 다양해졌고 시행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예술인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지원금이 엉뚱한 쪽으로 샌다는 것이다.

만약 현장 예술인들의 주장대로 지원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술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 낮아지고 있다면 지원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지원기관의 탁상행정이 빚은 부작용일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기관과 감사기관들은 어떤 부조리가 어떤 채널과 과정에서 발생하는지 밝혀내야 한다.

현장 예술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여기에 다 옮길 수는 없지만 복권기금으로 운용하는 소외지역 문화 나눔 사업과 문화바우처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을 순회하는 문화 나눔 사업 중 전통-문화-전시-창작 프로그램의 일부는 지역주민과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기인 위주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어 순수 예술인들은 참여기회가 줄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있다는 주장이다. 산간이나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사업일수록 여건도 열악한데다 대중친화적인 행사만 선호해 질이 떨어지고 순수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향수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바우처제도 역시 도서구입과 영화관람 쪽에 치우쳐 공연예술인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복권기금의 경우 소외계층의 예술향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리 소홀과 시행착오로 예술인 지원과 창작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Ⅲ. 예술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1. 지원 정책 목표 분명하게 설정할 때

결론적으로 예술인 지원정책은 현장 예술인들의 피부에 와 닿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예술인복지법이 제정 시행되는 시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세계 속에 내놓을 만한 엘리트 예술가 및 단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예술가를 지원할 것인지, 문화 소외계층을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는 만큼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이 대폭 정비되어야 한다. 생계지원과 고용 창출 등은 복지재단이 맡고 예술위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술위원회는 예술인을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지원금에 대한 사후 정산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지원을 받는 예술인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복잡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도 부담을 느끼지만 사후 정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문인들은 지원금의 용처가 많지 않아 정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이나 재단은 창작 내용을 심사해 지원만 하고 정산은 회계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정산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예술인들이 전국 단위 직접 공모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쿼터제를 도입해 보자는 것이다. 문화예술단체의 70~8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 실정에서 예술적 수월성으로만 평가하면 지역 예술인이나 단체는 선정되기가 어렵다. 지역쿼터제를 도입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예술단체들이 지역의 연고지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

국단위 공모사업을 따내면 지역문화 활성화는 물론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젊은 예술가 발굴을 위한 영 아트 프론티어 지원 사업을 중장년층에 까지 확대해 달리는 예술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젊은 예술가 양성 프로젝트는 지원기간도 2년으로 길고 자신의 성장 발전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해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타 기금과 달리 기금 사용에 제제가 많지 않다. 사진 촬영, 어학 공부, 워크숍 참석 등의 경비 지출도 가능하다. 현장에서 20~30년 이상 작업을 해온 중견 예술가들은 이 같은 지원 사업에 자신들도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섯째,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통한 공연단체와 지역기반 활동 예술단체의 협력과 상생을 유도해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정책을 협조하여 지역별, 공연장별, 공연단체별 특성과 지향점을 상호 이해하고 조율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공연을 제공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곱째, 복권기금으로 운용하는 문화 나눔 사업이 소외계층에게도 유익하고 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이 도움이 되도록 정비하는 일이다. 특히 복권기금은 액수가 큰데 비해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만큼 문화바우처 제도와 문화 나눔 사업 전반을 진단하여 누수현상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문화시설, 관광 인프라 구축 명분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자제토록 하여, 그 예산을 지역의 예술인재 양성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배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시설만 크게 만들고 그것을 운영할 인적 자원이 태부족인 기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역 예술인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활용하는 풍토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이상의 개선 방안은 지엽적일 뿐 혁신적인 개선책은 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조조정과 인적 쇄신이다. 문예진흥원으로 출범해 현재의 문화예술위원회로 오기까지 40년 가까이 쌓인 피로감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근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지적이다. 이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변화하는 시대 추세와 예술계의 다양화, 세계화, 전문화에 맞추어 거듭나야 한다.

예술위는 무엇보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1972년 문예진흥원 출범 당시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조라는 이념과 기초가 분명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화를 앞세울 뿐 우리의 정체성은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 속에서 경쟁하려면 우리 것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예술위는 목표와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술위의 당면 과제는 예술진흥기금 확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갈 위기에 처한 진흥기금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진흥기금이 확충되어야만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각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술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예술성 높은 작품 및 예술가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지원시스템에서는 의욕 있는 예술가나 공연 단체가 마음 놓고 공연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 해마다 지원을 받기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예산편성에 마음을 졸여가며 생존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시도되었던 다년간 지원 사업처럼 수년간의 검증을 통해서 평가받은 예술가 및 단체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수준 높은 예술가가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부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제 2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

김준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이 글은 2,3,4장은 예술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생태, 레지던시와 대안공간, 그리고 예술 매개자에 관한 필자의 글들을 토대로 재구성하고 가필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예술정책 개념의 전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래전략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예술의 지위와 역할에 있다. 예술위원회의 전략은 곧 한국의 예술정책의 골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술위원회는 지원사업의 실행 역할에 비해 정책생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예술위원회는 민간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한국의 예술정책 골간을 이루는 개념의 정립과 기초의 수립, 실천적인 정책의 수립 등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예술의 가치에 대해 전향적인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실행계획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한동안 예술의 산업화를 비롯한 다양한 논의들이 예술 본연의 가치문제를 압도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 같다. 그러나 문화산업과 예술의 가치는 그 범주가 사뭇 다른 문제여서 예술의 산업적 가치만이 아니라 예술 본연의 사용가치에 관한 주목과 그에 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 예술의 교환가치만을 우선시 하며 시장의 논리에 방치되어있던 예술생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류를 반영한다. 특히 예술인복지제도 논의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우리사회에 제공하는 예술노동의 건강한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더불어 지방 이전을 앞둔 예술위원회의 몇 가지 변화를 둘러싼 생각들도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거국적 시각의 균형발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 전체의 문화와 예술이 상호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균형 있는 생태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그 핵심이다. 특히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교류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는 교류의 범위나 방법이 국가단위 교류에서 도시단위 교류로 개념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국제교류의 시스템을 거국적 시각의 단일 창구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각 도시별로 특성화 가능한 도시 간 교류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도 논의를 모아볼 만하다. 국가대표 교류가 아니라 도시 간 상호교류와 같이 보다 미시적인 단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내셔널’에서 ‘인터시티’로의 전환이 이미 도처에서 예술개념과 정책 실행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술위원회의 현존 직접 지원 사업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필요하다. 사후지원 및 평가를 통한 환류 기회의 확산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량적 평가 시스템을 정성적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혹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현장의 비평적 리포트를 활용하면 정성적 평가 시스템은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다. 공정성 논의에 집중하여 사후지원을 회피하는 시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 많은 지원금으로 이뤄진 콘텐츠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아카이빙도 매우 시급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모든 지원사업의 성과를 아카이빙하는 기능은 지원 사업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것은 예술의 사업을 갈무리하는 일이자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축적하여 환류 가능성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러한 아카이빙이 있어야 그에 대한 비평 기능의 확장을 통해서 예술생산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곧 좋은 콘텐츠에 대한 프로모션 기능 확대이자 국제적인 교류의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술위원회의 지원정책 가운데서 문화공간과 간접지원 개념은 사업지원이나 직접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시각예술 정책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레지던시와 대안공간과 같은 공간을 통한 지원이야말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모션이 가능한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개별 창작지원에서 공간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논의는 근래의 예술정책 논의의 핵심이다. 각각의 콘텐츠의 수월성을 평가 판단하는 잣대가 비과학적일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의 구성에 따라서 임의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창작가 개인을 수혜자로 만드는 제도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기획과 프로모션이 가능한 문화공간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문화공간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아래에서 두 가지 공간에 대한 현황과 대안을 언급할 것이다. 간접지원의 문제는 그 갈래가 매우 넓다.

이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는 말에도 일말의 회의를 품을 때가 되었다. 예술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혜택을 베푸는 듯한 시혜의 관점에 대한 회의이다. 이제는 지원정책에서 진흥정책으로 진일보한 새로운 관점을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 예술가나 예술가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을 줄이고 교육이나 아카이빙, 국제프로모션,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방식의 간접지원을 핵심적인 예술위원

회의 사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예술위원회는 이제 한 국가의 예술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시민과 예술생산자들에게 양질의 예술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 예술은 사회적 제도이다. 근대 이후의 예술은 창작자와 향유자 사이의 매개역할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그 명암이 명확하게 갈리는 이른바 예술제도의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예술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예술의 매개역할을 활성화하는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예술지원정책은 매개역할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것은 간접지원의 핵심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예술 매개자에 관한 부분을 아래에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예술의 가치에 주목하는 예술정책

예술의 장은 서로 다른 심미적 가치들이 상호 경쟁하는 장이다. 그 다름의 경계는 개인과 개인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집단이나 지역, 국가, 인종, 민족, 젠더 등에 의해 구획된다. 다시 말해서 예술의 장은 각각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포지션에 따른 차이를 예술적 소통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술가 주체와 향유 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비가시적인 상징 가치의 생산과 교환의 공간이다. 따라서 건강한 예술생태를 논의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점은 예술의 장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구조 속에서 행위자로서 존재하는 예술가 주체와 향유 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상호관계성에 입각해서 양자 간의 교환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재구조화하려는 데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술 개념과 실천의 변화를 읽어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예술가 주체의 자율성을 예술적 공공성의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예술의 대사회적 자기정당화의 물음으로부터 출발한 공공미술의 흐름을 예술적 자율성과 공공성의 병존으로 독해함으로써 예술노동의 교환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하는 데에로 이어질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예술 지형은 모더니티에서 포스트모더니티로의 일대 전환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적 실험을 향한 환원적 태도에서 예술계 바깥 세상을 향한 확산적 태도로의 전환이기도 하며, 그 이전에는 관심 밖의 일이었던 실재 또

는 현실을 예술의 문제로 재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은 모더니즘적인 시각에서 예술의 종언을 선언하게 했다. 예술 내적인 아방가르드 경쟁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더니즘 예술의 극복이 동시대의 지평에 긍정적인 자양분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예술 개념과 제도의 혼돈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과 예술상품의 경계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품성과 예술성을 동일시함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교환가치로 환원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여전히 국제주의의 미망아래 목표와 가치를 상실한 비합리적인 예술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 나가서 전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력으로 첨부되는 것이 6,70년대의 관행과 별반 다르지 않다. 포스트모더니티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근대적 패러다임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다. 근대의 체계적 영역분할 개념을 고수하려는 학제와 장르별 구분 등은 우리가 새로운 예술가 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심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신자유주의 이념아래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전지구화의 흐름은 예술의 생산과 매개와 향유-소비를 자본주의 시장질서아래 편재시키고 있다.

예술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예견들 또한 이렇듯 모던과 포스트모던이 혼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극복으로부터 나온다. 그 조건들로 우리는 다음의 몇몇 이슈들을 언급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손꼽을 만한 것이 국가와 민족과 계급의 개념을 초월하는 탈 이데올로기적인 예술지형을 지향하는 문화민주주의의 가치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지역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또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화에 따른 예술의 생산근거 존재방식, 소통경로 등의 변화는 뉴미디어아트 시대를 열 것이다. 예술적 소통을 통한 공공영역, 다시 말해서 예술을 통한 공론장을 구축하려는 공공미술의 흐름 또한 주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이다. 동시에 포스트모던한 시대의 예술이 더욱 강조할 만한 덕목은 예술의 자율성에 관한 고민이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술적 실천을 인간 개인과 사회 전체를 성찰하는 영역으로 승인하고 그것을 예술적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왔던 정신적 가치를 새로운 흐름 속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위의 진단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몇몇 예술흐름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대 패러다임의 안정된 장르 개념을 벗어나려는 탈장르 실험예술, 장르와 장르 사이를 매개하는 장르혼합 또는 복합장르 실험, 예술과 생활을 매개하는 예술로서의 사이예술 개념 또한 예술가 주체의 지위를 새롭게 규명하는 주요한 관점이다. 디지털, 영상, 인터넷에 의해 견인되는 새로운 정보양식에 대응하는 뉴미디어아트 또한 예술의 생산 및 소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새로운 흐름이다. 이러한 이슈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공공성을 진작하는 예술이다. 공공예술은 기성의 안정된 예술 공간을 벗어나는 바깥예술로서 공공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예술 프로젝트들이다. 그것은 문화적 소수자의 문화생산과 향유를 매개하는 예술 프로젝트이자, 특정 장소나 사안에 개입하는 행동주의 예술 프로젝트를 포괄하며, 특정 공간을 활성화 하는 예술적 실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만들어낸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시민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공공적 예술실천들이 여럿 된다. 공공미술법이 기존의 건축물미술장식품이라는 공공조형물의 한계를 넘어서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새롭게 포맷하기 시작했다.

미술의 개념과 실천 영역의 변화는 새로운 예술가 주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은 구조적으로 미술생태의 변동을 견인하는 힘이기도 하다. 20세기 예술의 역할모델과 그 이후의 새로운 변화 양상은 예술노동에 대한 교환 방식의 차이에서 나온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예술가 주체는 예술상품의 생산자로부터 예술 공론장을 견인하는 행위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예술가가 상품으로서의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화폐와 교환하는 경제적 활동 범위에 포섭되어 있는 한, 예술노동은 필연적으로 소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예술노동의 소외는 매우 심각하게 예술가들의 존립을 위협해 왔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예술가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해 근본적인 성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예술정책이 추상적인 예술 개념이나 예술 향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예술가의 생존과 활동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가 점점 현실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노동의 경제적 교환방식을 변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20세기 모더니즘 예술은 예술노동을 예술작품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하여 삶의 맥락으로부터 분리하여 예술작품 자체의 내재적 논리에 따른 자율성의 길로 일로매진하였다. 예술을 심미적 가치를 담보한 물질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작품)이라는 물질을 사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에 무게를 두는 자본주의적 향유 체계 아래 포섭한 것이다. 물론 모더니즘 예술운동을 통해서 예술의 자율성을 이끌어 낸 것은 21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예술을 예술로 성립하게 할 예술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심미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믿고 있는 물질형식의 미술작품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에 거래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과연 미술이 정신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를 담은 정신노동의 산물인지를 심란하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국내외 유수의 경매시장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이 수억에서 수천억을 호가하는 고액에 거래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이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술적 가치란 특정 소수의 화폐권력을 대리하는 상징자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예술의 자율성이 이룩한 20세기 예술의 진보는 사적으로 소유 가능한 예술상품화를 결과함으로써 향후 예술작품이라는 물질의 사적 소유 구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단계의 예술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화폐권력과 직결되는 상징자본의 독점화 과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장 탄탄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 하나가 공공미술 논의와 실천이다. 그것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공공의 이슈를 다루는 미술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공기금을 통해 조성된 것이므로 사적소유 구조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능성을 지닌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제 공공미술은 개별 예술가들의 창작 단계를 넘어서 국가 단위의 법제도 정비에 이를 정도로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마도 20세기 후반 이후에 한국사회가 믿어왔던 미술의 제도, 관행, 영역 등은 공공미술이라는 제도, 관행, 영역 등에 의해 지금까지 차지해왔던 비중을 절반가까이로 낮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말 그대로 제도화된 미술로 자리 잡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크다. 생기를 잃고 박제화한 프로젝트성 바깥미술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예술적 자율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삶의 공간 속으로 파고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은 집약하는 개념이 예술과 지역성, 혹은 공동체 예술에 관한 논의이다. 탈 중심화에 따른 자치와 분권 실현의 시대정

신이 예술가의 실천 단위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을 꿈꾸는 지방, 뉴욕을 꿈꾸는 서울이라는 미술시장 중심의 위계를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예술이 공론장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최상의 조건이다. 지역공동체 속에서 창작과 향유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예술, 그것이 공공적인 예술의 이상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예술가 정책은 이러한 변화의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이어야 한다.

예술노동의 교환방식에 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가치지향과 활동방식을 뒤바꿔놓는 매우 근본적인 수준의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규모의 예술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 사회가 포괄할 수 있는 예술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신진예술가 이데올로기만 그럴싸하게 젊은 예술인들을 유혹할 뿐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진 예술인의 배출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교육시장의 과다한 예술인 육성 문제 또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 공론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가를 지향하며 사회로 나온 예비 예술가의 육성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예술생태 전반에 관한 진단과 처방 없이 신진 육성만 들먹이는 것은 헛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신진 예술인 육성이라는 개념이 안고 있는 한계와 장애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들로 집약된다. 신진예술인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정책, 예술인구 과다 경쟁으로 인한 예술노동의 가치평가 절하, 비평, 기획, 행정 서비스 등 매개자 역할의 전문성 부재, 예술의 사회적 역할 모델 부재 혹은 미흡으로 인한 편향된 접근, 기성 예술제도의 완고한 진입 장벽, 명망성 중심의 스타시스템에 길들여지게 하는 신진이데올로기 등이 그것이다. 예술인이 자리 잡을 토양은 부족한데 예술가를 지향하는 욕망은 끊임 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보다 전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공간을 확산해야 한다. 비영리 예술 활동을 보장하는 전시장이나 극장의 확산, 각 지역별 문화예술 공간 배치 및 기능 활성화, 제도적인 예술교류의 장, 레지던스 프로그램 확대운영, 지역 공동체가 예술인들을 끌어안는 구조 마련 등이 초보적인 대책일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자면, 예술가에 대한 조사, 연구, 비

평, 기획 기능 활성화, 미술 제도의 폐쇄성을 없애고 예술계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정보 소통 기능’ 활성화, 각종 언론 방송의 문화관련 보도 관행 및 체질 개선 등의 창작 매개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예술계 내부의 문제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보다 큰 차원에서 예술가 정책을 구상하자면 예술인들을 지금처럼 사회에서 비생산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잉여노동으로만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생산적 복지 개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의 사회공헌을 담보하는 일자리 창출, 예술생산을 향유와 소통으로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 육성, ‘예술창작 공공서비스’를 위한 역할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인을 사회부적응자로 보는 게 아니라 주요한 생산 동력 가운데 하나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다시 예술의 공공성 문제로 돌아가 보자. 예술생산이 개인의 사사로운 창작의지만으로 귀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공공서비스로서의 예술생산이라는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재로서의 예술창작의 기능을 재고하고, 건축, 가로, 도시계획, 공원, 문화공간 등 산업 영역과 예술창작의 창의적인 결합을 유도하며, 공공적인 산업영역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예술인 결합 구조를 마련하고, 공적기금을 활용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여러 기관 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와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의 사례가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좀 더 확산된다면 미술의 지위와 역할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미술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기존 시장질서는 소수의 명망가 및 전문업자 위주의 구조이다. 대다수 예술가들은 접근 기회가 없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공미술 제도개선은 시장 합리성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술가들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건강한 예술생태를 토대로 예술의 가치를 지향하는 논의는 예술의 장에 대한 구조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술의 장에 대한 구조적 사고는 예술의 생산과 매개와 향유로 이어지는 일련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별과 집단, 특수와 보편, 내부와 외부로 넘나드는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 그것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내재적 논리에 뿌리를 둔 닫힌 구조체로 바라보는 것로부터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 놓인 열린 구조체로 사고하려는 관점의 전환을 요청한

다. 앞서 언급한 예술의 공공성 또는 공공미술에 관한 논의는 예술가 주체를 사사로운 예술창작의지를 불태우는 비사회적인 개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문화생산에 종사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재규정하도록 할 것이다. 공공성의 기조 아래에서 예술의 생산과 향유를 매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예술노동의 사회적 교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강한 예술생태란 예술적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예술의 대사회적 공공성을 견지하려는 균형감각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생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혜적인 복지차원이 아닌 호혜적 관점의 생산 개념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3. 창작공간과 대안공간

오늘날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한 예술작품들은 양계장 무정란에 비유되곤 한다. 예술가가 각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내용과 형식을 가진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시장에서 요청하는 바, 또는 기성의 예술 트렌드에 충실한 작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창작스튜디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의 경우에 이러한 비판에 극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각 도시마다 앞을 다투어 창작공간을 만들고 있다. 10여 년 전에는 문화부에서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후 지자체와 기업에서도 임시거주 작업실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보편적인 예술제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예술가들에게 작업실 공간을 제공한다는 애초의 취지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1년이나 2년 단위로 작가가 교체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작업실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 공간들은 예술가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 언어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만남이 예술기들끼리의 만남, 또는 소수의 미술제도 엘리트들만의 만남에 그친다는 데 있다. 사회 전체와의 깊은 만남이 아닌 예술계 표피의 만남이 지속되다보니 어느덧 양계장 무정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도 창작스튜디오의 진화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대안적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들은 이미 새로운 미술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몇몇의 공간들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참신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기도 하다.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거점이자, 지역의 커뮤니티 아트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도시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빈번하게 오가는 예술가들이 그 도시공동체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예술가들의 왕래는 문화적 개방성의 척도이다. 바야흐로 미술관, 화랑, 대안공간과 함께 창작스튜디오가 새로운 미술 담론과 실천을 견인하는 시대이다. 창작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대안공간들이 10년의 실험을 거쳐 한국 시각예술계의 근간을 이루는 풀뿌리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안공간들이 전국적으로 고루 자리 잡으면서 문화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정기공모를 실행하고 있다. 대안공간과 사립미술관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공간지원을 통하여 각 지역의 미술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대안공간의 명단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10여년의 역사를 넘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10여 년 전부터 대안공간 활성화를 주도했던 공간들이 여전히 좋은 공간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각 공간의 차별화를 위해 변화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각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공간의 활동이 도시의 예술적 활동과 더불어 도시 전체의 문화적 맥락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안공간 활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몇몇 개의 공간은 활동의 방식이나 결과가 다소간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역 거점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어서 향후 대안공간이 전국적으로 고루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대안공간들은 지난 1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젊은 작가들을 제도권으로 올려놓는 매개 역할을 충분히 해냈을 뿐더러 여전히 미술생태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심적인 공간들이다.

후발 대안공간들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때로는 열악하다거나 상투적이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하지만, 지역도시의 대안공간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을 염두에 지켜보아야 할 곳으로 보인다. 몇몇 공간들은 한정적인 작가군들을 위한 폐쇄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만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갖기도 한다. 물론 한 공간이 독창적인 색채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포인트가 어긋난 비판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저러한 생각이나 태도를 가진 대안공간이 폐쇄적인 제도미술권의 권력중심에만 관심을 가졌을 때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숙고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권력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대안성을 이야기하기란, 그것도 제도 안에서의 대안적인 지위를 획득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대안공간들은 젊은 작가들 또는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목표를 두고 꾸준히 활동해왔다. 커뮤니티스페이스로서 지역공동체와 동행하는 대안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체계적인 대안적 예술행동을 펼치는 곳도 있다. 이밖에도 아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충분히 자질을 인정받고 있는 많은 공간이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안양의 대안예술공간스톤앤워터, 부산의 오픈스페이스배, 인천의 스페이스빔, 안산의 커뮤니티스페이스리트머스 등은 대안공간의 대안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기성의 미술제도가 허락하는 단선적인 활동 방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다. 다원예술을 지향하는 공간들도 장르 혼용과 복합장르실험을 벌이고 있는 좋은 거점공간들이다. 요컨대 10여년의 역사를 꾸린 대안공간의 대안성이 지역성, 공동체성, 예술행동 등의 화두와 만나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4. 예술 매개자 육성

한국의 지역 도시들은 아직 체계적인 예술계 생태의 성립을 이루지 못했다. 인구 1백만이 넘는 거대도시가 다섯 개나 되는데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 거점도시에서 예술생산과 매개가 자생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예술 매개자 인력의 전문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각 도시별로 예술 영역의 전문 인력 양산 시스템은 이미 수효를 초과할 정도로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예술생산을 소비로 연결할 매개자 전문 인력을 양산하는 시스템은 태부족이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

만 대체로 예술 매개자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예술 관련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에서 매개자를 길러내는 데 매우 인색한 형편이다. 실기 관련 교수들의 자리를 줄이고 이론/경영 부분의 학제를 만드는 일이나, 문제제기는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매개자들을 수용할만한 기관이 없다는 게 악순환의 연속을 만드는 이유이다. 물론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지위와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문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가의 영역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실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해서 제대로 일을 풀어나가기보다는 학연과 지연, 인맥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방도시의 예술 관련 매개 인력들의 전문성은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예술매개자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는 강력한 중심주의 프레임 속에 있다. 물론 개발경제의 추진에 필요한 몇몇 지역은 경제적으로 수혜를 누린 사례도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제반 영역에 있어 결핍과 부재의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지난 10여 년 전부터 도시 간 소통의 활성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제도의 정비 등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인다. 이러한 조짐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개별 주체들뿐만 아니라 공론장 차원의 각성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경영/매개 관련 전문가들이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각 지역의 예술 매개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는 인식은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하게 한다. 아직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사례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 활동가로서의 예술인들을 들 수 있다. 각 지역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대안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가, 예술 매개자들이 해당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례들을 여기저

기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들 공간들만 해도 인천과 서울, 안양, 안산, 수원, 원주, 청주, 청송, 부산, 광주, 진안, 대전, 공주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해있다. 오히려 이들 공간은 벌써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한 공간들이다. 그 밖에도 수많은 공간과 개인들이 각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울이라는 단일한 중심을 벗어나서 각 지역의 다양한 거점을 중심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지역 간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의 예술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인프라의 부재이다. 하지만 물리적 인프라보다 중요한 것인 인적 인프라이다. 좋은 공간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경영인/매개자를 세우는 일이다. 전국에 산재한 문화공간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프로그래머/큐레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문 인력 부재나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역 간 연대가 있다. 각 지역의 예술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넘치는 것을 나누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이다. 디지털과 인터넷, 그리고 영상이 매개하는 정보양식의 비약적인 발전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더 이상 지역의 경계가 치명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정보양식 아래의 예술경영/매개자들은 서로의 부재와 결핍을 보충하고 대리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퍼져나가고 있다. 예술 영역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변화의 양상이다. 각 지역에서 나고 자란 예술인 또는 예술경영/매개자가 그 지역의 전문가로서 도시나 공동체 차원의 예술적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의(localism)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지역의 예술 전문가들이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유와 실천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을 상호지역주의(inter-localism)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소수의 운동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관행과 제도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교육과 시장, 개인, 기관, 관료사회가 예술분야의 지역 전문가들과 협업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한 일이다. 전지구화가 개인에게 내리 쬐는 보편언어가 횡횡하는 시대이다. 지역성과 전문성의 동행은 지역적 사유와 지역적 실천에서 나온다. 그것이 전 지구적 보편언어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삶과 예술을 살리는 길이다.

2부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제 3

문화복지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이지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문화 복지

1. 문화 복지의 개념

-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라고 규명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 지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복지법에 나타난 문화복지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문화적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라고 볼수 있다고 하여, 문화복지의 권리화에 대해 법적 측면에서 고찰된다.
- 문화복지는 궁극적으로 문화 생산자가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소비자가 주체가 되므로 각 개인과 가정이 문화복지의 대상이 되며 문화향유 주체인 개인과 가정이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 일일 생활권역, 즉 기존 시군구를 기초단위로 전제하고 있으며,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분야의 시설지원과 프로그램을 활용 가능한 문화복지의 수단으로 고려하였다.¹⁾

2. 문화 복지의 필요성

-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와 함께 자아실현의 욕구, 문화에 대한 욕구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향유는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 학력, 연령, 성별, 장애, 거주지역, 출신 국적 등의 차이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놓여 있는 구성원들은 소득 및 시간의 제약,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문화향유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²⁾.

1) 문화체육관광부, 1996,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

2) 이해승(2011), 문화복지사업추진실태분석(감사연구원)

- 문화소외계층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미에서 발전하여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문화행사 또는 기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문화 소외 계층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화생활비용 지원, 문화체험 기회 확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서울시·자치구·민간부분에서의 관심,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확충, 저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등과 같은 문화 향유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수요와 욕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문화 소외 계층의 이러한 문화적 욕구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적 접근성이 낮고 참여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였다³⁾.

3. 문화복지의 의의

- 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공급하고 지원한다면 소득재분배와 문화정체성 형성 및 사회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한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 향상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으로 문화복지는 새로운 시민권의 하나로서 ‘문화적 권리’를 인식하는 관점

II. 문화여가지원 사업의 평가

1. 문화여가지원사업 평가 개요

- 정부는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제고하기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2008,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위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적 감수성 제고,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하에, 문화여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최근 문화복지는 정부의 친서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대표적인 문화복지 정책의 일환인 문화여가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을 점검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총 41개 사업으로 27개의 직접사업과 14개의 간접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관부처는 문화부, 복지부, 교과부, 여가부임.이 중 문화여가 지원사업군의 심층평가는 문화부가 진행하고 있는 27개의 직접사업을 중심으로 수행 (별첨 1을 참조)
- 문화여가지원 사업의 평가는 매개인력, 이용자, 비이용자의 설문조사와 매개인력 FGI로 구성되었으며, 본 토론회에서는 FGI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

2. 문화여가지원사업 평가 : Focus Group Interview (FGI)

- 문화여가 지원 사업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문화여가 지원 사업 관련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 총 13회를 각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권역별(수도권, 강원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로 구분하여 실시
- 주요 내용은 지원 사업의 현황 파악, 사업간 대상별 유사중복 성격 파악, 사업의 파급효과 및 필요정도의 파악, 사업의 개선방안 및 보완점 파악 등을 포함.

3. FGI 분석 결과

1) 현 제도의 효과성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능력 개발 - 문화여가지원사업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었던 이용자들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시켜 줌.
- 인지·학습능력 향상 - 문화여가활동은 이용자의 이해력과 묘사능력과 같은 인지능력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킴.
- 자존감 향상 - 고급공연의 향유, 고급악기의 연주, 자신의 문화예술활동을 무대에 올리는 경험 등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됨.
- 정서·사회적 능력 향상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정서문제를 보인 아이들이 꿈을 찾게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음.
- 대인관계 능력 향상 - 문화여가활동이 가족이나 중요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매개가 되고,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해 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족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관계가 개선됨.
- 행복감 증진 - 문화여가지원사업은 문화적 소외를 겪어온 취약계층의 삶에 활력을 주고, 이로써 이들의 행복감 증진에 기여함.
- 나눔 능력 향상 - 문화여가지원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시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눔 뿐 아니라 매개인력인 예술가들도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나눔에 대한 인식과 나눔 능력이 향상됨.
-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취약계층이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은 대중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함.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거나 무대에 공연을 올리는 취약계층의 모습은 그들에게 붙어있던 낙인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데 기여

2) 현 제도의 문제점

(1)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소외계층을 문화공연장으로 처음에 끌어내는 게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임.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역주관처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특히 재가대상자 발굴은 쉽지 않음. 서비스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 발굴과정이나 이용과정에서 어떤 대상자들은 낙인감을 느껴 서비스 신청을 주저하거나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2) 예산

- 지원금 수준의 한계 - 문화바우처로 제공되는 연간 5만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낌, 저소득 가구당 1매 지원이 되고 가정에 청소년이 있는 경우 추가 개별카드가 발급되지만 이 지원금 수준으로는 가족이 함께 영화나 전시를 관람할 수는 있지만 고급문화를 향유하기에는 부족함.
- 지원금 범위의 한계 - 식사나 간식을 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차량지원과 동반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
- 무료이용의 문제 - 공짜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적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기 쉬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욕구가 생길지라도 무료 혜택의 학습효과로 인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음.

(3) 지급방식

- 카드지급의 문제 - 각 바우처 별로 카드가 지급되므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관 및 소지에 따른 불편이 많고 분실의 위험도 큼.
- 개별, 세대별 지급에 따른 문제 - 바우처 카드가 개인 또는 세대별로 지급됨으로써 바우처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여행바우처의 경우, 세대별로 지급되면 한부모와 자녀 1명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는 나머지 자녀를 두고 갈 수 없어 바우처 사용을

포기하기도 함.

(4) 프로그램 공급자와 이용시간의 문제

- 무료로 제공되어도 공연의 수준이 떨어지면 취약계층도 공연관람에 의욕적이지 않을 수 있음. - 많은 문화예술 공연들이 선정심사를 거친 후에 제공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더러 영세한 소규모 기획사들에 의해 기획되어 제공될 경우 공연 수준이 이용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함. 또한 많은 공연이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아닌 저녁이나 밤시간 또는 주말에 제공되어 시설장애인이나 어린이, 일부 노인들은 관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5) 전달체계

- 문화예술계와 복지계 간의 상호협력 부족 - 주관기관인 문화예술분야의 사람들은 사회복지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이들에게 맞는 문화예술활동을 기획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또한 복지계와 공식적인 협의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실무 담당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지자체의 소극성 - 문화복지는 지자체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나 문화복지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 공무원들이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기도 함. 지자체 공무원들은 문화복지사업을 자신들의 고유 사업으로 여기지 않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열의가 부족하기도 함.
- 관리감독의 문제 - 관리감독의 문제는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들 측에 상반된 의견을 냈음. 지나친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고도 생각하고 관리감독이 체계적이지 않고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 사용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우려하기도 함.
- 중복성의 문제 - 문화복지 서비스는 주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중복성의 문제가 발생. 문화바우처 프로그램 내에서는 중복이 없으나 큰 틀에서는 중복이 발생. 문화예술의 경우, 일회성의 이용보다는 자주 체험을 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필요
- 홍보의 문제 -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며, 문화복지사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더

라도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6) 매개인력

- 매개인력 역할의 불명료성 - 문화바우처 업무는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 측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복지 대상자인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매개인력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복지사의 역할이 행정업무로 축소될 수 있음.
- 문화예술인의 문제 - 매개인력으로 활동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낮게 책정된 강사료는 교통비도 안 될 때가 있어 문화복지가 이들의 생활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는데 한계 있음. 소수의 문화예술강사들만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된다는 것도 문제.

(7) 지역적 특색

- 중소도시의 문제 - 중소도시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 큰 도시에 인접해 있는 작은 지역의 경우 사람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인접한 도시로 빠져나가 중소도시는 문화여가와 관련하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남. 강사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중소도시로 오도록 독려할 만큼의 대가가 제공되지 못함.
- 농어촌의 문제 - 농어촌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부족. 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문제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이용방법이 농어촌사람들에게는 어렵다는 게 문제

(8) 서비스 유형

- 문화바우처의 문제 -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문화욕구 촉발 효과를 많이 내고 있으나 그 활용도나 학습효과가 지역과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큼. 문화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사람들과 장애아동들이 사용하는

데 한계

- 체육바우처의 문제 - 체육바우처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이나 체육바우처는 신청기간의 제한과 신청을 해도 선정될 확률이 너무 적다는데 문제 있음. 서비스를 받게 되었어도 일정한 단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므로 학생들이 다음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효과를 포기해야 하는 게 한계
- 여행바우처의 문제 - 여행바우처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우처이지만 지원 한도 내에서 가게 되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좋은 곳을 가게 되면 자부담을 해야 함. 인솔교사의 비용이 제공되지 않아 자비를 들여 가야하는 것과 지원액에 교통비와 숙박비만 지원이 되고 식비는 지원이 안 되어 식비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바우처를 포기. 시중 다른 여행상품보다 비싸면서도 알차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여행사를 끼지 않으면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문제. 특정 카드만 사용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 기획바우처의 문제 - 기획바우처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
- 체험형의 문제 - 체험형은 관람형에 비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한계
- 전시관람형의 문제 -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외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우 전시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이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음. 대부분의 전시나 공연이 대도시의 번잡한 위치에서 이루어져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걸어야 하는 불편함 발생

Ⅲ. 문화 소외 계층 지원 – 문화여가지원사업 개선 방안

1. 문화계와 복지계의 협력체계 구축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체계 구축

- 문화여가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대부분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가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수혜대상자의 사업 참여도 및 사업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임.
- 문화여가 지원사업의 주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와 대표적인 사회복지 조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원의 MOU가 체결되고, 이러한 협력체계가 각 분야의 본부 및 해당 지역의 시도 단위의 지방문화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 MOU 체결로 협의체제가 확대된다면 모셔오는 공연, 찾아가는 공연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

2) 사회복지사교육을 활용한 문화복지 교육 및 홍보

- 사회복지사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협회나 사회복지관 협회 등에 배치하면 문화계와 복지계를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 수행 가능.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기적 보수교육 시간을 통하여 문화여가지원사업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전문가가 문화 복지 교육을 제공한다면 문화 여가지원사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 문화복지 교육 내용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 관리체계, 매개인력에 대한 교육,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현재 사회복지계에서는 “문화의 집”과 같은 형태의 지역사회내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와 연계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기존의 문화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어 문화 소외계층이 문화시설에 친숙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

2. 기업과 전략적 관계 구축

1) 정부와 기업의 협의 하에 MOU 체결로 현재 “사랑티켓” 사업을 특정 기업 주도하에 운영하여 “사랑티켓 브랜드”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 “A 사랑티켓”으로 운영한다면 바우처와의 중복성도 해소되며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다양한 효과 기대
- 또한, 나눔티켓(객석기부)과 같은 바우처의 부가적인 혜택을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협력하도록 유도 가능

2) 전문기업과 전문 분야의 파트너십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

- 문화 바우처 중에서 영화의 경우 기업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영화관이 존재하는데, 특정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더욱 폭넓고 다양한 할인 혜택이나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 가능
- 특정 기업과 파트너십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FGI 결과에서도 보고되었듯이, 현재 이용자들의 대다수도 지리적인 여건보다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특정 기업의 영화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별첨 1

〈표 1〉 문화여가기회 확대 지원 평가대상 사업군 개요

사업명	회계	대상	지원내용	전달체계
경제적 소외계층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문화바우처)	문예 기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① 문화바우처카드 가구당 연간 5만원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지자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지역 주관처
		독거노인/재가장애인 농어촌지역민 등 (기타 문화소외계층 포함)	② 기획바우처 (지역주관처기획사업)	
체육 바우처	체육 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7~19 세 복지시설 유·청소년	강좌: 월 최대7만원	17개 지자체 및 국민체 육진흥공단
체육 바우처 (관람)	공익 사업 적립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람 개인당5만원 단체5만7천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단체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취약계층 복지관광 (여행바우처)	관광 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행바우처카드 국내모든 여행 상품 및 숙박 항공 유원시설 이용 개인 15만원 가족 30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6개 시도 및 시군구
사회적 소외계층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창작나눔)	문예 기금	임대아파트, 농산어촌 장애인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장애인문화창작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4개 시행 단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체육 기금	장애인	종목별 장애인생활 체육축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생활 체육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전문체육지원 ('12년신규사업)	체육 기금	장애인선수 -장애인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창단 비용의 50% (2억원이내) -장애인 선수 고용 실업팀/ 기존장애인팀 (2천만원이내)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체육 기금	장애인선수 -장애인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건립 2단계 추진 장애인올림픽참가 훈련실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명	회계	대상	지원내용	전달체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지원	일반 회계	60세 이상 노인(1차) 지역주민(2차)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동아리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함께누리 지원	일반 회계	장애인-사립문화시설 이용장애인, 장애문화예술인 및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편의시설지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체험프로그램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각자치단체 (사)한국장애인연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문화 사회 문화환경 조성	일반 회계	다문화가족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이주청소년 문화감성 증진 -결혼이주여성 2세 자녀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이주청소년 지원 센터 및 기관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사회문화 예술교육활성화)	일반 회계	지역주민	생활권내에서 학습 할수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개 시도, 16개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취약계층 복지관광(장애 인관광버스개조)	관광 기금	장애인 관광버스	관광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 및 장착 개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공연나눔)	문예 기금	소외계층,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시설 등	민간공연예술단체 (전시 포함) 관람할인(사랑티켓), 소회지역(시설) 순회공연 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전시나눔)	문예 기금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문화소외계층	전시 및 체험교육 개최 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한국박물관협회
지리적 소외계층				
방방곡곡 문화예술 활동지원	일반 회계	전국 70개 지역문예회관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문예회관, 재정자립도 40%이상 지역 제외)	국립예술단 직접 찾아가는 공연 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예술꽃 씨앗학교지원)	일반 회계	400명이하인 소외지역 의 초등학교 26개교 전교생	전교생 1인 1예능 활동 4년간 지원(1개교매년1억원범위내)	문화부→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역사 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일반 회계	지역주민	생활권 내에서 학습 할수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개 시도, 16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업명	회계	대상	지원내용	전달체계
국민독서문화 증진지원(소외 계층독서활동)	일반 회계	소외계층	어르신 대상 대할자본 제작 및 보급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농어촌복합체육 시설지원	체육 기금	농어촌주민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5개 소),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단위)
복합적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소외계층생활 체육지원)	체육 기금	소외계층	생활체육용품 지원-노인시설, 소외계층 시설 / 실버스포츠 보급-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 체육지원	국민생활체육회
영화향유권 강화(문화소외 계층관람환경 개선)	영화 기금	전국문화시설초중 고등학교생및 동반가족: 회당200여명	찾아가는 영화관- 우수 한국영화 무료상영 및 영화교실참여	한국영상자료원
소외계층문화 역량강화 (문학나눔)	문예 기금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 관, 교정시설등소 외 지 역시설 2,900여곳	분기별로 우수문학도서 선정·보급 ('12년분기당57종,연230여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 화예술위원회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운영	일반 회계	저소득층 결손가정 등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 (135센터)	지역적, 문화적 소외아동에게 도서관 사서가 아동센터에 찾아가 다양한 책읽기 및 독서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 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공공도서관 →전국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과 연계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박물관교육 및 도서실운영)	일반 회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교육 및 도서실운영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교육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나눔교육 문화프로그램)	일반 회계	장애아동,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문화소외지역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 미술관소풍, 미술관 초청교육,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다문화가정 미술관 소풍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회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일반 회계	아동양육시설, 노인, 장애인복지관,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및 장애예술가(단체)의 예술창작과 표현 활동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명	회계	대상	지원내용	전달체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예술 강사지원)	일반 회계	전국초중등학교 (6,531개학교)	8개분야 예술강사 4,263명 파견	문화부→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운영단체)

자료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2부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1. ‘문화예술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정중헌)

- “초기 문예진흥정책은 민족문화 중흥을 목표로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조라는 이념과 기초가 분명했다…이 같은 이념과 기초가 퇴색한 채 지원 체계만 복잡해 졌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러한 이념과 기초가 퇴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도 예술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인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통해 유지, 구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 다만, 3~4공화국은 우리나라 최초로 문예 진흥을 위한 법 제정과 기구 설립, 그리고 5개년 계획 시행 등의 공(功)이 있지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 ‘민족문화 중흥’이라는 목표를 문화예술 전 장르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우리 사회에 획일적인 문화를 낳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 그러나 발제자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세계 속에 경쟁하려면 정체성이 강한 우리 것이 필요”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조라는 이념과 기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원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지원
-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 “최근 들어서는 40년 가까운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부합할 만큼 수준 높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키워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1972.10.11 문예진흥원(예술위원회의 전신) 개원 이래 2009년 선택과 집중 지원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36년여 동안, “최저 수준에서나마 최대 다

수의 예술가와 단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액다건의 분산지원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 그 결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실이 예술위원회(문예진흥원) 40년의 지원성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역문화재단과 역할 분담을 통해 적어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는 세계적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키워내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 예컨대, 아르코 영 아트 프론티어(AYAF,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원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한 두 번의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 후의 역량 강화 실적을 심층적으로 심사하여 분야별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신진예술가 각 한 명에 대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 수혜자 간에 지원금을 역량 강화에 보다 충실하게 활용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이다.

○ “... 예술인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을 뿐 아니라 절차가 복잡하며,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후 처리가 까다로운 기관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천신만고 끝에 지원금을 타내면 우선 생계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창작 활동에 필수적인 제작비는 줄어들고, 제작비가 충분치 못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 정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과거 수년 동안 1천만 원 이하의 지원건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집행항목만을 적고 증빙서류 첨부를 면제한 적이 있었으나,
- 기간(基幹) 문예단체 등이 지원금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 발각된 후, 모든 지원 건에 대한 정산제로 환원하고 보조사업비 체크 카드제, 사례비 원천징수 의무화 등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 문예진흥기금(복권기금) 지원금은 생계비 지원이 아니므로 지원금 유용을 막기 위해 정산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판단됩니다.

- “지원정책이 다양해졌고 시행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예술인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지원금이 엉뚱한 쪽으로 샌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기관의 탁상행정이 빚은 부작용일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기관과 감사기관들은 어떤 부조리가 어떤 채널과 과정에서 발행하는지 밝혀내야 한다.”
- “문화바우처 제도가 도서구입과 영화관람 쪽에 치우쳐 공연예술인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는 일반대중의 취향에서 볼 때 공연예술이 도서나 영화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바우처 사용 한도액이 5만원(청소년이 없는 가정의 경우)에 불과하여 한 가족이 공연작품을 감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소외지역 문화 나눔 사업의 경우 “산간이나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사업일수록 여건도 열악한데다 대중친화적인 행사만 선호해 질이 떨어지고 순수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합니다. 복권사업으로 시행하는 문화나눔사업의 경우 수요자 맞춤형 눈높이 프로그램을 강조하다보니 그러한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맞춤형 순수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 예컨대,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 삽입되었던 잘 알려진 클래식 음악만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퀴즈식으로 진행하면서 중국에는 오케스트라나 실내악단이 해당 음악이 들어간 악장 전체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언젠가 들은 듯한 클래식 음악 여행」이라 이름 붙여도 좋을 듯함)을 통해 수요자 눈높이와 순수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관객의 취향을 개발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세계 속에 내놓을 만한 엘리트 예술가 및 단체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예술가를 지원할 것인지, 문화 소외계층을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앞서서도 밝혔지만 엘리트 예술가단체 집중 지원과 보편적인 예술가단체 중점 지원 문제는 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간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지원은 예술위원회의 지원정책 목표에

서 삭제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나눔사업의 재원인 복권기금 전입금(2012년 574억 원, 2013년 576억 2,100만원)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결국은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향수와 예술가예술단체 육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업프로그램의 개발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예술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에서 지역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 전국 단위 직접 공모사업에서... 지역쿼터제를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 전국 단위 직접 공모사업에 지역쿼터제를 도입해 보자는 주장은 예술적 수월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현행 선택과 집중 방식 지원제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2014년부터 지역협력형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컨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예술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시행하고, 지역예술단체의 경쟁력이 강화된 후에는 양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 아크 프론티어 사업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중견 예술가에게도 확대 시행 하자는 주장과 문화나눔사업이 소외계층에게도 유익하고 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비하자는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2.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 (김준기)

○ 두 번째 발제에 주어진 주제는 ‘문화공간 활성화 및 문화예술 간접지원’으로, ‘예술, 가치, 그리고 정책의 문제’라는 다소 무거운 제목으로 주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발제문의 내용 중에 크게 논란이 될 만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술정책 개념의 전환

- 예술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예술정책 개념의 정립과 예술의 가치에 대해 전향적인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실행계획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 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공공미술사업운영 10억 원 포함)를 5대 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2012년과 2013년 각각 9,402백만 원 기금예산 투입
- 국가 전체의 문화와 예술이 상호성의 관점에서 균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예술위원회의 현존 직접 지원사업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필요
- 예컨대, 사후지원 및 평가를 통한 환류 기회의 확산, 정성적 평가 시스템의 도입, 사후지원을 회피하는 시류의 극복, 비평기능 확장을 유도할 아카이빙 기능 등 주장
- 레지던시와 대안공간 등 공간 지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모션이 가능한 좋은 사례로서, 예술위원회가 지원정책에서 진흥정책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지원을 줄이고 간접지원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
- 간접지원(교육, 아카이빙, 국제프로모션, 컨설팅, 네트워킹)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예술자료원, 예술경영센터 등과 역할 분담
- 예술위원회는 시민과 예술생산자들에게 양질의 예술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진원지가 되어야 하고, 창작자와 향유자 사이의 매개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 예술의 가치에 주목하는 예술정책

- 예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슈들로, 문화민주주의의 가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지역성, 뉴미디어아트, 공공미술, 예술의 자율성 등을 꼽고 있음.
- 특히 발제자는 20세기 예술의 자율성이 이룩한 예술적 가치가 특정 소수의 화폐권력을 대리하는 상징자본화 되었음을 비판하고, 예술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서 공공미술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 창작공간과 대안공간

- 오늘날의 레지던스 프로그램(특히 창작스튜디오의)을 통한 예술작품들을 양계장 무정란에 비유하면서 비판

- 예술시장이 요청하는 바, 또는 기성의 예술트렌드에 충실한 작품을 내놓는다는 이유로 비판, 창작스튜디오의 진화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
- 반면에 대안공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점을 제시하는 외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예술 매개자 육성

- 이 부분에서 발제자는 예술영역의 전문인력 시스템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정작 예술생산을 소비로 연결한 매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시스템은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
- 더욱이 매개자들을 수용할만한 기관이 없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합리성이 떨어짐.
- 각 지역에 전국적인,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활동하는 예술 매개자가 늘어나는 일부 긍정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 인적 인프라의 부족 현상은 심각하며, 전문 인력 부재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간 연대, 즉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유와 실천의 폭을 넓혀 가는 상호지역주의 예술로의 진화가 필요

3. ‘문화복지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이지하)

- 이지하 교수님의 발제는 문화향수(문화, 체육, 관광을 포함하여 ‘문화여가’) 지원사업 관련 매개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FGI) 결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문제점에 따른 사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 선에서 예상되었던 문제점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 분석은 앞으로 예술위원회의 문화복지사업 담당자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문화향수 지원사업 개선 방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체계 구축, 즉 MOU 체결을 주문하셨는데,
 - 얼마나 양 기관 간에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문화복지사업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인력을 활용하자는 제안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업무보고에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을 밝힌 바 있으며,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2012년 1월 말부터 3월까지 부산과 전북에서 16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문화복지사 제도가 도입되고 상당수의 문화복지사가 양성되기까지는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문화복지사 : 일반 국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서비스하는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중 제도적으로 인정된 인력 (정부공인 자격증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몇몇 민간단체가 ‘문화복지사’라는 명칭으로 민간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음)

- 기업과 전략적 관계 구축에서 ‘사랑티켓’ 사업을 특정 기업 주도하에 운영하여 ‘사랑티켓 브랜드’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 ‘사랑티켓’은 ‘문화사랑카드’라고 하여 과거에는 한일은행(현 우리은행)과 제휴하여 혜택을 주었고, 현재는 KB(국민은행)과 제휴하고 있으나,
 - 발제자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브랜드화를 통해 기업의 홍보마케팅과 고객 혜택의 획기적인 증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문가포럼

“새로운 문화예술, 통섭과 융합”

2012년 10월 26일 14:00 - 17:30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새로운 문화예술, 통섭과 융합〉 전문가포럼은 일상화 되어가는 스마트기술이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환경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통섭과 융합의 개념적 논의에서 출발해 융복합 시대 예술과 기술의 가치를 짚어보고, 이어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장르를 넘나드는 생생한 융복합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봅니다.

사회 및 진행 김찬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전문위원)

발제 융복합 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위상

14:00-15:40

- 융합 개념과 융합의 현주소 : KAIST CT대학원 문화-기술 융합 사례를 중심으로
우운택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융복합 시대 예술의 새로운 위상과 가치
유진상 (2012미디어시티 전시감독,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 융복합 환경과 새로운 예술창작기반 조성방안
이원곤 (단국대학교 서양화과 교수)

토론 융복합 시대 문화예술 현장과 새로운 지원방안

15:50-17:20

- 융복합 예술의 실제 : ‘페스티벌 봄’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희 (‘페스티벌 봄’ 대표)
- 미디어 기반의 융복합 예술창작 및 지원 플랫폼
김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 인문학을 통한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의 가능성
심보선 (인문예술잡지 ‘에프’ 편집위원, 경희사이버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 과학기술 기반의 융복합 프로그램의 실제와 과제
전병삼 (사회적기업 ‘코이안’ 대표)
- 대학로 융복합 거점공간 확충을 위한 사례비교 및 시사점
최흥철 (독립큐레이터)
- 융복합 예술을 위한 실험음악의 위상
홍철기 (실험음악가)

지역문화 창조포럼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

2012년 10월 30일 중부권(대전)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내 컨벤션홀

2012년 10월 31일 호남권(광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2012년 11월 05일 영남권(부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지역문화 창조포럼’은 중부권(대전), 호남권(광주), 영남권(부산)의 지역문화 거점을 순회하는 공개포럼 행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역문화 전문가들과 함께 아르고 중점과제인 지역별 고유문화브랜드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문화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 창조포럼 중부권(대전)

2012년 10월 30일(화) 15:00~17:3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내 컨벤션홀

사회 최남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부 15:00-16:25

개회 개회사 및 오프닝공연

발제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토론 지역고유 문화브랜드 개발 및 육성방안
송 전 (한남대학교 문화대학원장)
윤성희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회장)

2부 16:35-17:30

발제 공공기관 이전 시대 전국의 문화지원정책 네트워크 구축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토론 권역별/지역별 지역문화협력체계 구축 방안
김승환 (충북대학교 교수)
임재광 (공주대학교 교수)

지역문화 창조포럼

지역문화 창조포럼 호남권(광주)

2012년 10월 31일(수) 14:00~ 16:40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회 이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부 14:00~15:20

개회 개회사 및 오프닝공연

발제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빛가람혁신도시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이전에 따른 역할 재정립과
지역협력체계 개편
윤성진 (아르코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단장)

2부 15:35~16:35

종합토론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과 지역문화협력체계 구축 방안
이무용 (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문안식 (전남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상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조상필 (전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김진엽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지역문화 창조포럼

지역문화 창조포럼 영남권(부산)

2012년 11월 5일 (월) 14:00~16:40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공개홀

사회 임 호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14:00~15:20
개회 개회사 및 오프닝공연

발제 1 청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발전전략 :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욱 ('안녕 광안리' 발행인)

발제 2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컬(glocal) 지역협력체계 구축 :
부산 문화예술, 지역과 세계를 넘는 길
오재환 (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장)

2부 15:35~16:35
종합토론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과 지역문화협력체계 구축 방안
임 호 (진행)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병욱 (부산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김원명 (경성대학교 교수, 음악평론가)
김현정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회 정책위원장)
최학림 (부산일보 논설위원)
황해순 (부산예술대학교 교수)



Future Strategy

F O R U M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정책세미나 - 예술지원정책 현황 및 전망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주관



2012 ARKO
미래전략포럼
준비소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